

2021 한반도 평화 관련
석학 초청 강연 시리즈

1회 4월 30일 연사: 김학준 교수

2회 5월 27일 연사: 하영선 교수

3회 6월 25일 연사: 박상섭 교수

4회 9월 10일 연사: 박찬욱 교수

*마지막 5회차는 논의 중입니다.

1. 강의안

이상(또는 환상?)과 현실 사이에서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자신의 공부를 돌이켜 본 ‘비(非)정치학적’ 에세이

김학준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1. 인사말씀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그리고 통일·평화연구소 여러분.
두 연구소가 함께 마련한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늘 그러했지만, 특히 오늘날 한반도의 대내외상황은 엄중합니다. 한반도의 국제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미국과 중국은 여러 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에 대해 상대방을 거부하고 자기 편에 서라고 양자택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강원도 평창에서의 겨울 올림픽 기간에 형성된 남북 ‘화해’ 분위기와 그것에 뒤따른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의 ‘화해’ 분위기, 그리고 2018년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의 싱가포르에서의 제1차 정상회담 전후에 잠시 과시됐던 미·북 ‘화해’ 분위기는 가라앉았습니다. 남한이 북한에 대해 끊임없이 ‘유화적’ 자세를 보이는데도 북한은 핵개발을 과시하면서 무례하게 대응할 뿐입니다.

대외상황이 녹록지 않은 터에, 한국의 국내상황은 불확실과 불안정의 연속입니다. 코로나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민생의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정부와 다수 국민 사이의 간격은 더욱 넓어졌고 국민통합의 과제는 정부에 대한 지지와 반대의 대결이 깊어지면서 그 실현이 점차 멀어지고 있습니다. 대외상황과 대내상황을 연계시켜 볼 때, 과연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연합’ 기초작업은 둘째로 하고 비전비화(非戰非和)의 평화라도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비록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주제를 붙들고 공부해 온 제가 그사이 지냈던 생각들을 솔직히 털어놓으면서 무엇이 괜찮은 것이었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는지 자성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현재의 상황과 관련해 조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최근의 북한상황을 포함한 한반도상황과 우리의 대응에 관해 저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년 2개월 사이에 이미 네 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¹⁾ 마지막 논문을 발표한 때로부터 겨우 3개월이 지

난 이제 새로운 내용과 논지를 담은 논문을 발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와 관련해 제가 어려서부터 체험했던 일들을 통해 형성된 관념과 독서를 통해 갖게 된 지식을 중심으로 ‘비(非) 정치학적’ 에세이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제 발표에 부족한 부분은 제가 이미 발표한 네 편의 논문과 연결시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 부모님을 통해, 그리고 전언을 통해 갖게 된 소련과 공산당에 대한 반감

저는 1943년생으로 중국 요녕성 심양에서 태어나 1945년 말과 1946년 초 사이의 어느 시점에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부모님이 심양으로 이주하기 이전에 사셨던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긴 여정에 대해서는 기억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만, 훗날 부모님과 형님은 그 과정에서 목격했거나 체험했던 소련군의 만행에 대해 회고하곤 하셨는데 그것을 통해 저는 반소적 성향을 갖고 자랐습니다.

인천은 새삼 설명할 필요 없이 항구도시입니다. 그때는 육로보다 해로가 수월한 편이어서, 남쪽으로부터는 전라도와 충청도 분들이 그리고 북쪽으로부터는 평안도와 황해도 분들이 배편으로 인천에 이주했습니다.

남쪽에서 오신 분들은, 특히 전라도 분들은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는데 “공산당은 총알을 아낀다고 돌로 사람을 때려죽였다”는 끔찍한 전언(傳言)이 제 뇌리에 남았습니다. 훗날 이 두 사건에 대해 기록과 연구논문을 통해 진상에 훨씬 더 객관적으로 접하게 됐습니다만, 어린 시절에 접한 그 전언이 오랫동안 제게 각인되어 있었음이 사실입니다.

북쪽에서 오신 분들은 북한 공산정권을 “남의 아버지를 ‘아바이 동무’라고 부르는 등 위 아래가 없는 상놈들이다”라는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인 저희 가정에서는 “공산당은 기독교를 탄압하는 무신론자이다”라는 믿음을 지녔습니다. 공산당 하면 그저 공포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3. 6·25전쟁이 심어준 북한과 김일성에 대한 반감

그 연장선 위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 6·25전쟁을 만났습니다. 인천에서 걷고 걸어서 아버님의 고향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 일대의 여러 고모님들 집을 차례로 돌아

1) 1. 「남북한통일문제 접근법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성찰」. 인천대학교 통일·통합연구원 주최 한반도통일문제세미나(2019년 11월 7일)에서 발표.

2. 「북한의 핵개발과 신냉전」. 화정평화재단(2020년 1월 20일)에서 발표. 『북핵볼모 대한민국: 전문가 32인 갈 길을 말하다』(화정평화재단, 2020), 308~315쪽에 재수록.

3. 「1950년대 북한의 핵과학 연구와 1960년대 북한의 핵개발 토대 구축: 소련의 대북한 지원과 관련하여」.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 편, 「집요했던 북한 핵개발」, 『기रो에 선 북핵: 바이든 시대 전문가 진단』(동아일보사 부설 화정평화재단, 2020), 228~240쪽에 수록(제목은 편집자가 바꾼 것이다).

4. 「국제관계의 전환점에서 제6공화정 출범(1988년) 이후 역대 정부가 추진한 대북·통일정책을 재평가하면서 그 변화의 방향을 모색해본다」. 인천대학교 통일·통합연구원 주최 한반도통일문제세미나(2021년 2월 2일)에서 발표.

가며 약 3개월에 걸쳐 피난생활을 했습니다. 청원군의 어느 고모님 집에서 살 때는 다른 어린이들과 함께 인근의 초등학교 교정으로 불려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도 배웠습니다. 그 긴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으니, 네 가지만 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분위기는 늘 살벌했습니다. 비록 7~8세의 어린이였지만 “사람이 공산당 치하에서는 살 수 없구나”라는 느낌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그때 저희 집안은 그들이 쓰는 말로 ‘프롤레타리아트’에 속했습니다. 그들의 이론대로라면 특권은 아니더라도 조금만 큼의 여유라도 누려야 할 무산자계급에 속한 우리 식구는 역설적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늘 긴장 속에서 이웃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젊은이가 “이제 낙동강만 넘으면 끝이야. 그때는 삼촌이고 조카고 사촌이고 없어 반동분자는 모두 인민재판에 세워 숙청이야”하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나름의 사연이 있었겠지만, 어머니는 평생 그 일을 기억하시고 “나는 그 사람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회상하시곤 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팔손을 눈앞에 둔 저로서도 북한 또는 김일성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때의 살벌한 분위기, 그리고 그 젊은이가 떠들던 ‘반동분자’ ‘인민재판’ ‘숙청’이었습니다. 사회의 일각에서는 ‘반공’이 국민을 억압하기 위한 과거 ‘독재정권’의 도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비판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저는 ‘반공’에는 질식할 것만 같던 비인간적 공산통치를 경험한 사람들의 자발적 동의가 상당히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청원군의 어느 외진 시골에서 살 때였습니다. 청주사범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의용군’으로 끌려가는 것을 피하려고 이곳 친척 집에 은신하고 있었는데, 밤이 되면 같은 연배의 우리 형님에게 “단파방송을 통해 들으니 미군이 참전했고 곧 공산군을 물리칠 것이니 조금만 참고 견디자”라고 격려하곤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해 유엔 깃발 아래 참전한 우방의 도움으로 그리고 미군의 지원을 받은 국군의 용전으로 우리는 공산치하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유엔군이 청주·청원 일대까지 진격함에 따라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북한군이 후퇴하면서 청주형무소에 불을 지른 사건입니다. 그 근처 어느 친척 집 지하실에서 생활하던 우리 가족은 아버님으로부터 저것이 자신들이 가둬놓았던 사람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짓이라는 말씀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훗날 한국정부에 의해서도 여러 곳에서 양민학살이 이뤄졌음을 알았지만 그 사실을 몰랐던 그때로서는 공산당에 대해서만 증오심을 가졌습니다.

저희 가족은 맥아더 원수가 지휘한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따른 서울수복 직후 인

천 본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회분위기는 공산치하의 분위기와는 달랐습니다. 비록 도시가 여기저기 파괴된 상태 아래 누구나 다 가난하게 살았으나 서로 웃으면서 지난날의 고생담을 털어놓는 인간적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국군을 포함한 유엔군의 북진에 따라 남북통일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그러나 그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국군이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밀고 올라갔을 때 중공군이 개입함에 따라 '1·4후퇴'를 강요당하면서 다시 피난길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남북통일을 좌절시킨 '중공 오랑캐'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6·25전쟁의 체험은 저로 하여금 평생에 걸쳐 이 주제를 붙들고 공부하게 했습니다. 1975년 『서울평론』에 첫 논문을 발표한 이후 『한국전쟁: 원인·과정·휴전·영향』(박영사, 제4수정증보판, 2010)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글을 썼습니다.

4.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유엔군의 재반격으로 전선이 안정되면서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학교에서의 교육은 당연히 철저한 반공·반북교육이었습니다. 특히 조회시간에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우리의 맹세」를 3항까지 큰 소리로 외치곤 했는데, 제3항의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통일을 완수하자”를 외칠 때에는 북진통일-----, 이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당시 자주 열렸던 웅변대회장에도 여러 차례 불려나갔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도교사의 가르침에 따라 북한에 대한 공격 포인트에 김일성의 비둔한 체구를 포함시켰습니다. 남에서나 북에서, 특히 북에서, 대다수 ‘인민’이 굶주리고 사는데, 김일성만 저렇게 살찐 돼지처럼 아주 뚱뚱한 것은, 혼자 잘 먹고 지냈기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러면 청중으로부터 박수가 쏟아져나왔습니다. 하나의 가설입니다만, 김일성이 인도의 간디처럼, 베트남의 호지명처럼, 또는 ‘조선의 간디’라고 불리던 조만식 선생처럼 마른 체구였다면, 남한사회의 그에 대한 인상은 꽤 달라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5. 『삼국지』와 『몬테그리스토 백작』을 읽고 통일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다

조회시간에 「우리의 맹세」와 함께 따라다닌 것이 「통일의 노래」였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의 통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5학년 때 몇몇 친구들과 함께 정음사가 출판한 삼국지를 읽으면서 그 첫 구절로부터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천하는 합한지 오래면 반드시 나뉘고 나뉘지 오래면 반드시 합한다(天下, 合久必分, 分久必合)”라는 유명한 구

절은, 좀 거창하게 말한다면, ‘역사 전개의 법칙’을 가르쳐주는 것 같았습니다. 좁게는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에 대한 해답을 찾음에 있어서 하나의 단서처럼 느껴졌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었으니 반드시 합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키웠습니다.

비슷한 시점에, 역시 몇몇 친구들과 함께 알렉상드르 뒤마의 운테크리스토 백작을 소년소녀용으로 다듬은 완굴왕혜라는 책을 읽다가 어느 한 구절에서 역시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살아서는 결코 나올 수 없다는 샤토디프의 감옥에서 주인공 에드몽 단테스를 교육시킨 파리아 법사가 「이탈리아를 통일시킬 군주는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논문을 썼다는 대목입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으며, 서로 싸웠습니다. 이 현실에 개탄한 법사는 이탈리아의 통일을 갈구하면서 그러한 논문을 썼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경우에도 한반도를 통일시킬 지도자가 반드시 출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고, 그러한 지도자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포부도 가졌습니다.

6. 마르크스의 잉여가치론에 접하다

저는 1958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유진오 선생이 쓴 「공민」이라는 교과서의 말미에 그 제목이 정확히 떠오르지는 않지만 대체로 「마르크시즘 비판」이라는 부분이 실려 있었는데, 담당교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셔서 학생 거의 모두가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저도 그냥 지나가다가 어느날 우연히 그 부분을 읽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진오 선생이 마르크스---그때의 표기로는 맑스---의 이론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비판했는데, 소개와 비판 가운데 많은 것은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오직 기억나는 것은 잉여가치론과 노동착취론이었습니다. “상품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을 통해 만들어낸 것인데도, 자본가는 그 상품의 가치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노동자에게는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저임금만 주는 방식으로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뜻이었습니다.

8·15해방 이후 우리 사회에서 널리 쓰인 말들 가운데 하나가 ‘모리배(謀利輩)’였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만화에는 으레 배가 똥똥하고 살찐, 그리고 얼굴에 개기름이 흐르는 ‘모리배’가 등장했습니다. 짧은 견문 탓에, 저는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가’는 바로 ‘모리배’를 가리킨 것이라고 여겼고, 노동자가 피땀 흘려 창출한 가치를 ‘모리배’ 곧 자본가가 ‘착취’하는 것으로 여겨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1958년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최빈국에 속한 때였습니다. 나라 전체가 가난했고 굶주림이 만연했습니다. 직장다운 직장은 적었고 대도시에는 육체노동자의 상징과 같은 수많은 지게꾼이 날품팔이로 생계를 힘겹게 이끌었습니다. 한 인간의 지적 성장과정에서 매우 민감하던 때인 10대 중반에 들어선 저로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떨쳐 버릴 수 없었던 터에 ‘노동착취’론에 접하게

되자 세상을 이 이론 하나로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에 빠져들었습니다.

훗날 저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한 원로학자께서 “자네야말로 젊은이가 마르크시즘에 기울어지게 되는 길을 걷는 한 전형과 같네. 일제 때, 일본의 젊은이를 보면 빠른 경우에는 소년기에 아무리 늦어도 20대 초에 현실사회를 비판적으로 보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대부분이 마르크시즘 비판서를 읽다가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위해 그 전제로 소개한 마르크스의 이론 그 자체에 빠져들었네. 나도 그러했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인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워,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분은 일제 때 일본의 명문 고등학교 학생으로 마르크시즘에 빠져든 이후 평생을 마르크시즘과 씨름하셨고 마르크스의 윤자본론에 대한 책도 출판하신 저명한 경제학 교수이셨습니다.

7. ‘제3의 이데올로기’라는 말이 준 충격

다시 고등학생 시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사회과학 쪽에 소양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신 선생님이 두세 분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김근수 선생님이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문리대 독어독문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니체를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으셨던 분으로 독일유학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의 가난의 원인을 남북분단에서 찾으면서 이것을 해소하지 않고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 해법으로 ‘제3의 이데올로기’의 창출을 제시하셨습니다. 남(南)의 ‘자본주의’와 북(北)의 ‘공산주의’를 모두 포용할 수 있는, 헤겔의 용어를 빌린다면, ‘자본주의’라는 테제와 ‘공산주의’라는 안티테제를 지양한 진테제로서의 제3의 이데올로기가 남북 모두에 수용될 때 통일이 가능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선생님은 그 ‘제3의 이데올로기’가 자신의 유학을 가고자 하는 독일에서는 ‘사회민주주의’로 불리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비현실적인, 글자 그대로 환상이었습니다만, 저는 정말 혹했습니다. ‘제3의 이데올로기’라 -----, 저는 온몸에 전기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김근수 선생님이 그 뒤에 걸었던 길은 선생님이 평소에 지녔던 생각을 반영했습니다. 4월혁명으로 제1공화정이 붕괴된 뒤 ‘혁신’운동이 전국적으로 활발해졌을 때 인천에서 ‘창사회(創思會)’ 창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고 5·16군사정변 직후에는 박정희 장군의 ‘민족적 민주주의’에 공감해 민주공화당 창당에도 관여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자리를 탐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맞게 “새로운 사상을 창조한다”는 운동에 공명하셨고 또 ‘민족적 민주주의’가 ‘제3의 이데올로기’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셨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제3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관심을 북돋아주신 분이 또 계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문리대 정치학과 4년생으로 모교에 와서 영어를 가르친 유영익 선생님이 그분입니다. 훗날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림대학교 부총장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는 선생님은 ‘제3의 이데올로기’를 공부하고자 한다면 문리대 정치학과로

진학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거기에 계신 민병태 교수는 런던경제정치대학교 정치학 교수이면서 영국 노동당 중앙집행위원장으로 '자유와 평등'을 조화할 수 있는, 곧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조화할 수 있는 페이비언 사회주의 이론을 정립하는 작업에 종신한 해럴드 라스키에 정통하시기에, 그분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8.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에 접하다

고등학생 때 받았던 또 하나의 지적 자극은 심재갑 선생님의 평화통일론이었습니다. 6·25전쟁 때 당시 학제로 중학교 5학년생이었던 선생님은 국민방위군에 징집돼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면서 전쟁의 참상을 목격했기에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키우셨습니다. 마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장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던 때 죽산 조봉암이 평화통일론을 제창하면서 '무산대중을 위한 혁신정치'를 표방하는 진보당 창당을 준비하자 공감해 죽산의 사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졸업 직후 자신의 모교인 우리 학교에 교사로 부임해 「공민」을 가르치셨는데, 정부가 죽산을 '용공분자' 심지어 '공산주의자'로 몰았기에 그의 대명사와 같던 평화통일론을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생님이 지도하신 웅변반 소속인데다가 제 형님이 선생님의 중학교 동기생이라는 점 때문에 저를 각별히 배려하면서 꼭 죽산의 평화통일론이 아니라고 해도 일반적 의미의, 곧 외교를 비롯한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평화통일론에 관심을 갖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유행했던 웅변대회에 나가는 경우 다른 연사들이 으레 사자후를 토하며 옹호하던 복진통일론을 부르짖지 않도록 주의를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1971년 대통령선거 때 '4대국 안전보장'론을 골격으로 하는 평화통일론을 제시한 김대중 신민당 후보를 지지하고 김 후보의 지원을 받아 인천에서 국회의원 총선에 입후보하고자 한 것은 그러한 신념의 연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죽산의 평화통일론에 대한 관심은 훗날 저의 졸고 「진보당 평화통일노선의 재평가: 조봉암의 정치이념의 형성과정 및 내용과 관련하여」(정태영·오유석·권대복 공편, 윤죽산 조봉암 전집 6권[세명서관, 1999] 가운데 제6권, 171~215쪽)로 나타납니다. 또 죽산의 따님 조호정 여사의 초청을 받아 죽산의 기일에 망우리공동묘지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해 조사를 했던 것으로 이어집니다.

9. 1960~1961년의 혁신계 통일운동에 자극을 받다: '수렴'론과 '중립화'론에 접하다

고등학교 3학년 때 4월혁명이 일어나고 곧바로 혁신계의 통일운동이 전개됐을 때 김근수 선생님과 심재갑 선생님은 이 주제에 관심을 갖도록 이끄셨습니다. 이때 촉발된 관심이 훗날 저의 졸고 「제2공화국 시대의 통일논의: 그 내용과 정치적 평가」(윤국

제정치는총하15[1975년 12월], 73~101쪽)에 반영됩니다.

두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당시 혁신운동의 중심이었던 사회대중당의 핵심 이론가였던 이동화 선생을 책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도쿄제국대학 법학부 정치학과에 입학한 이후 일생에 걸쳐 마르크시즘을 연구해 김일성대학 교수도 지냈고 월남한 뒤에는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계시며 ‘남한에서 마르크시즘 연구의 제1인자’라는 평을 듣던 분입니다. 자유당정권이 진보당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낸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도 했으나 4월혁명 직후 동국대학교 교수로 봉직하는 가운데 ‘사회민주주의’의 실현을 지향하셨습니다.

선생이 소개한 이론 가운데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수렴’론이었습니다. 자본주의도 변하고 사회주의=공산주의도 변해서 어느 한 공통된 지점으로 ‘수렴’된다는 이론이었습니다. 원래 제정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교의 국제적 사회경제학자로 볼셰비키혁명이 일어나자 미국으로 망명해 하버드대학교 교수로 봉직하던 피터림 소로킨이 개발한 이 이론은 학계에서 공감대를 넓혔습니다.

선생은 이 이론에 기초해, 남한은 자신을 사회민주주의 쪽으로 변화시키고 북한은 자신을 사회민주주의 쪽으로 변화시켜 남과 북이 사회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광장으로 ‘수렴’될 때 남북통일이 실현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선생의 이 이론은 ‘제3의 이데올로기’론에 부합했기에 저는 거기에 푹 빠졌습니다. 제가 뒷날 그분을 직접 만나 뵈고 **윤두산 이동화 평전: 한국에서 민주사회주의 운동을 개척한 정치학자의 이념과 행동**(해민음사, 1987년 초판: 단국대학교출판부 2012년 개정증보판)을 쓴 것은 그때 받은 지적 자극이 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남과 북의 ‘수렴’에 따라 사회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광장이 마련될 때 한반도의 ‘중립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론이었습니다. 우리는 ‘약소국’으로 오랫동안 주변 강대국에 의해 희생됐기에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중립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정하게 호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미국 연방상원 외교분과위원장 마이크 맨스필드가 1960년 10월 코리아를 오스트리아 중립화 방식으로 중립화시켜 통일시키자는 방안을 제의해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그 분위기 속에서 일부 혁신세력이 중립화통일운동을 전개하자 주요한 신문들은 모두 이것을 연일 크게 보도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도 여기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제 생각이 어떻게 확정되는가에 대해서는 15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 문리대 입학직후의 교내 분위기

1961년 4월 문리대 정치학과에 입학한 직후입니다. 4월혁명 1주년을 맞이한 문리대 캠퍼스는 온갖 현수막과 강연회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째, 본관 1층에 들어서면 벽에 큰 유화가 하나 걸려 있었는데,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학생 몇이 서서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래 “독일 대학생은 셋이 모이면 독일통일을 토론했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독일이라고 불리는 지역에는 여러 왕국과 공후국이 병립해 있을 뿐 단일국가 성립하지 못해 주변강대국에게 눌러지냈습니다. 그러했기에 뜻있는 사람들은 독일의 통일을 꿈꾸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학생들이 참여한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에 큰 관심을 갖고 진학한 저에게 이 유화는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둘째, 문리대 교정 한가운데에 걸려 있던 「반(反)봉건, 반(反)제국, 반(反)매판」이라는 커다란 플래카드였습니다. 4월혁명의 정신을 3반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취지였는데, 여기서 ‘반제국’은 ‘미제국주의’에 반대한다는 뜻이었고 ‘반매판’은 ‘매판자본’에 반대한다는 뜻이었습니다. 6·25전쟁 때 우리를 공산치하에서 해방시킨, 그리고 전후의 경제복구를 지원한 미국을 ‘제국주의’로 규정하고 반대한다? 저로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무렵에 미국 콜롬비아대학교의 라이트 밀즈 교수가 1960년에 출판한 옳이라 양키들이야가 고려대학교 신일철 교수에 의해 번역됐습니다. 이 책은 쿠바에서 친미 바티스타정권을 무너뜨리고 공산혁명을 지향한 카스트로의 집권을 찬양한 것으로, 대학사회에서 널리 읽혔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미국은 적어도 쿠바에 대해서는 제국주의 국가가 틀림없었고 카스트로혁명은 정당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쉬워집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물려 문리대에서 통일문제 강연회가 열렸을 때, 몽양 여운형 선생이 발족시켰던 근로인민당에서 활동하다가 감옥생활도 했고 4월혁명 직후 사회대중당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곧 사회당 창당에 참여해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유병목 씨도 연사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사이 중앙대학교 교수로도 활동한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팸플릿 우리 민족끼리를 배포했는데, 그 요지는 ‘미제국주의’와 손을 끊고 ‘매판자본주의 세력’도 내쫓은 뒤 북한과 협력해 ‘자주적 민족경제’를 일으키자는 것이었다고 기억됩니다.

그는 상당한 수준의 웅변가였습니다. “여러분. 쿠바의 처녀들은 월경만 끝나면 곧바로 쿠바 영토에 속하는 관타나모에 설치된 미해군기지에 창녀로 팔려갑니다. 이것이 미제국주의의 착취에 시달리던 바티스타정권 아래서의 쿠바였습니다”라고 외치면서 반미주의를 선동한 다음에, 당시의 장면정부가 바티스타정권처럼 ‘미제국주의’에 ‘예속’되어 있다고 규탄하면서 장면정부 타도를 선동했습니다.

셋째, ‘매판자본’에 대해서입니다. ‘매판’이라는 말이 우리 출판물에 처음 등장한 것은 고려대학교 김준엽 교수가 1958년에 출판한 중국공산당사학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분은 1962년에 출판한 중국최근세사학에서도 이 단어를 다시 쓰셨습니다. 요컨대, 중국상인으로 중국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서방자본주의 상인의 이익을 위해 상행위를 하는 사람을 ‘매판’이라고 중국인들이 매도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시 중국인들은 이 ‘매판’을 내쫓아야 중국의 독립이 이루어진다고 믿었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여기에 자극받아 우리 사회의 일부 지식인들은 당시 막 자라나고 있던 몇몇 국내기

업을 ‘매판’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그 기업을 오늘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이며 결코 매도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선배지식인들의 영향을 받은 일부 대학생들은 그들을 ‘매판자본’ ‘매판상인’이라고 매도하는 분위기에 편승했던 것입니다.

‘반제’와 ‘반매판’의 바탕에는 ‘민족’이라는 또 하나의 사회과학적 개념이 놓여 있습니다. 강대국 제국주의는 약소민족인 우리 민족을 지배 또는 착취했고, 극소수의 매판상인은 자신의 주인인 강대국 상인을 배불리기 위해 대다수의 동족을 수탈했다는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공부는 여물지 않고 감수성만 발달한 경우, 쉽게 민족주의의 마력에 빠져들게 됩니다. 저도 1963년 10월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민족적 민주주의’를 제시했을 때, 일정하게 공감했음이 사실입니다. 1964년 도쿄 여름올림픽 때 북의 육상선수 신금단과 남의 아버지 신문준의 상봉이 좌절되면서 남한사회에서는 분단의 비극에 대한 개탄이 다시 만연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민주공화당 이만섭 의원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면회소 설치’를 제의하자 공감이 확산됐고 윤선일보하는 민족의 통일을 촉구하는 기획물을 연재해 여론을 크게 자극시켰습니다. 이 일련의 상황 전개를 보면서 저는 통일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였습니다.

1964년 11월 황용주 문화방송사 사장이 윤세대에게 발표한 논문 「강력한 통일정부에 의 의지: 민족적 민주주의의 내용과 방향」이 반공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중앙정보부가 배포를 금지시키고 필자를 구속시켰을 때, 그 논문을 읽어보지 못한 상태였지만 자연스럽게 호의적 관심을 가졌음이 사실입니다. 훗날 기소과정에서 그가 그 논문을 통해 주한미군철수와 한반도문제에 대한 유엔불개입 등을 제의했다는 보도에 접하고는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서울대학교 최문환 교수의 윤민족주의의 전개과정해백영사, 1958)은 이러한 지적 풍토 속에서 일정하게 독자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 책을 여러 차례 속독했습니다. 특히 제정러시아의 후반기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제정러시아에는 두 개의 러시아가 있었으니, 하나는 지상(地上)의 러시아이고 다른 하나는 지하(地下)의 러시아였다. 러시아혁명은 결국 짜리즘이라는 억압적이며 반인민적인 지상의 러시아를 대체해 자유롭고 평등한 러시아를 건설하기 위해 온갖 탄압을 견뎌내며 투쟁하던 지하 러시아의 승리였다”는 취지의 구절은 큰 울림으로 들려왔습니다. 필자는 그 울림의 연장선 위에서, 훗날 윤러시아혁명사해문학과지성사, 1979년 초판, 1999년 수정증보판)를 출판합니다.

11. 「네오 이데아 소사이어티」 발족에 참여하고 양호민 교수의 ‘반공적 사회민주주의’를 받아들이다

앞에서 말했듯, “독일 대학생은 셋이 모이면 독일통일을 토론했다”라는 제목의 그림이 준 감동은 저로 하여금 「네오 이데아 소사이어티(Neo-Idea Society)」라는 서클의 발족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정치학과의 이준일 군과 김문원 군, 외교학과의 황정일

군, 경제학과의 김종섭 군 등이 주역이었습니다. 정치학과의 김영국 교수님이 지도교수를 맡아주신 덕에, 문리대 학생과에 서클설립등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서클의 이름 그대로 우리는 '새로운 이념' 곧 '제3의 이데올로기'를 찾기 위한 책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민병태 선생님께서 라스키의 국가론 강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영국 노동당을 '빨갱이 집단'으로 보고 그 노동당의 핵심적 이론가인 라스키를 '빨갱이'로 보던 당시 공안당국 일각에서 선생님을 의심하게 되자 선생님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행여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에게 어려움이 생길 것을 염려해 라스키에 대한 전면적 강의를 주저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자신이 번역한 조지 세바인 교수의 윤정치사상사하전2권을 정독하라고 권하면서 마르크스에 대한 이해나 라스키에 대한 이해도 서양정치사상 전반에 대한 이해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이어 김상협 교수의 윤기독교민주주의·사회민주주의·교도민주주의해지문각, (1963)와 윤모택동사상해지문각, (1964)도 읽었는데 특히 모택동의 「모순론」으로부터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현실을 「모순론」에 입각해 분석할 수 있다는 생각마저 가졌습니다. 황성모 교수의 윤현대사회사상사: 사회학적 고찰과 평가해민조사, (1964)도 읽었으며, 이집트의 나세르, 인도의 네루, 그리고 유고슬라비아의 티토에 관한 책도 읽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와 함께 이끌었던 인도네시아 반동에서의 제1차 아시아-아프리카회의, 이른바 반동회의에 관한 자료도 어렵게 구해 읽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구의 제국주의와 신식민주의에 대한 반감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아프리카의 민족주의에 대한 공명을 더욱 강하게 키웠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관심이 점차 마르크시즘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시 학계에서 '마르크시즘 연구의 쌍벽'으로 이동화 교수와 양호민 교수를 뽑았는데, 이 교수는 5·16군사정변 직후 구속됐기에 볼 수가 없었던 반면에 양 교수는 윤상계하주간으로 종로구 한청빌딩에서 활동하셨기에 직접 찾아뵙고 지도를 청했습니다. 제가 자신의 문리대 정치학과 후배라고 반가워하며 흔쾌히 받아주셔서, 「네오 이데아 소사이어티」 회원들과 함께 선생님이 지정하시는 시간에 그 사무실에서 알프레드 마이어 교수의 윤레닌이즘을 비롯한 몇몇 원서를 읽어다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생님은 새로운 용어를 하나 가르쳐주셨습니다. 마르크스와 마르크시즘을 연구하는 분야를 마르크스올로지(Marxology)라고 부르고 마르크스올로지를 연구하는 사람을 마르크스올로지스트(Marxologist)라고 부르는데, 마르크스올로지스트는 마르크시스트와 같은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부터 자네들도 마르크스올로지스트가 된 것일세”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선생님이 철저한 반공·반소·반김일성의 입장을 유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레닌이즘은 레닌이 평소에 말하던 것과는 정반대로 프롤레타리아를 억압하기 위한 이론적 무기로 전략했으며, 레닌과 스탈린을 비롯한 소련의 역대 지도자들은 모두 독재자에 지나지 않고, 더구나 '작은 스탈린'인 김일성은 폭압자일 뿐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러한 전제 아래, 선생님은 당시 서독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에서 실험되던 사회민주주의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양호민 선생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날까지도 잊히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르크스의 사상과 이론 가운데 많은 부분이 후대의 학자들에 의해 논파됐는데도 어째서 그 생명력이 유지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연관된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 영국의 세계적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왜 나는 마르크시스트가 아닌가」라는 논문에서, “마르크시즘에는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 나는 나를 기꺼이 희생시키겠다는 순교자적 정신이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다고 소개하면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모순이 많은 사회에서는 반드시 순교자적 정신이 등장하기 마련이며 그 순교자적 정신은 ‘좌파적 기독교 사상’이나 또는 마르크시즘에 대한 지지로 나타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이 지적이 오늘날 한국사회의 한 이념적 흐름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사회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 모순을 해결하거나 아예 제거할 수 있다면 내 한몸 감옥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 나는 순교자의 길을 걷겠다”라고 확신한 사람에게는 그가 믿고 있는 것이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도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옥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복돋는 글이 그 무렵에 발표됐습니다. 작가 이병주 선생은 1965년 7월 윤제대혜에 발표한 중편소설 「알렉산드리아」에서 “사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감옥을 간다. 자신의 사상이 자신이 살고있는 사회와 불가피하게 충돌하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습게 들릴 것 같습니다만, 솔직히 말해 저는 사상문제 또는 신념문제로 감옥에 간 사람들을 존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팔순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지난날을 회상하건대, 제가 존경하거나 좋아했던 사람들은 대체로 사상문제 또는 신념문제로 감옥에 갔다왔거나 또는 감옥의 담 위를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제도권에서 ‘출세’한 사람보다는 제도권 밖에서 ‘탄압’을 받거나 감옥을 다녀온 운동권 사람에게는 무언가 마음의 빛을 진 느낌을 지녔었습니다. 그러나 운동권 사람이 집권한 이후 위선을 드러내고 범법도 서슴지 않고도 궤변을 늘어놓으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을 자주 겪은 뒤 부채의식을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12. 김일성의 ‘자주’와 ‘주체’에 대한 비판

저는 졸업과 동시에 ‘비판적 지식인’의 대열에 참여하겠다는 결심에서 조선일보사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윤동아일보와 윤준선일보가 모두 합격했으나 당시 ‘최고의 신문’으로 꼽히던 윤동아일보대신에 윤준선일보를 택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으나 윤준선일보가 1964년 연재기획물에 나타났듯 통일문제에 대해 훨씬 더 ‘진보적’이라는 제 나름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윤준선일보에서의 경험에 대해서는 제가 윤환기 한국 외교의 시련과 극복: 60년대 정치부 기자의 증언(하조선일보사, 1993)에서 상세히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되풀

이하지 않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같은 연배의 몇몇 기자들과 함께 부정기적이거나 독서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중앙정보부 요원이 직접 거의 매일같이 편집국에 출입하며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았기에 조심스럽게 모이곤 했습니다. 거기서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의 조운 로빈슨 교수가 1965년 1월에 「먼슬리 리뷰」에 발표한 「코리아의 기적」이라는 논문을 매우 어렵게 입수해 함께 읽었습니다. 로빈슨 교수는 자본론 또는 자본축적론 분야의 세계적 학자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러한 그녀가 1964년 10월에 짧게 북한을 다녀온 뒤 발표한 글이었기에 국제적 관심을 촉발하기에 충분했던 것인데, 문제는 북한의 경제를 ‘기적’이라고 높이 평가한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그 ‘기적’의 원천이 김일성의 ‘메시아와 같은 카리스마적 지도력’에 있고 따라서 김일성의 지도력 아래 남북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썼으니 한국정부로서는 불쾌한 수준을 넘어서서 용납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우리 모임의 몇몇은 그 글 가운데 김일성의 주도 아래 남북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을 빼놓고 나머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우리가 북한과 김일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어린 시절의 ‘체험’으로부터 그 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념적으로 매우 편향된 글이라고 보았습니다. 앞의 시각을 지녔던 회원들은 훗날 일관되게 반정부 또는 반체제 운동에 참여하고 그리하여 영예스러운 비판적 지식인의 명단에 등장하게 됩니다.

둘째, 김일성과 관련해 토론의 주제 가운데 하나로 꼭 등장한 것이 그가 표방한다는 ‘주체’와 ‘자주’입니다. 이것과 관련해, 당시 조선일보사 논설위원으로 봉직하던 양호민 교수는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가 말하는 ‘주체’와 ‘자주’는 민족과 국가 또는 인민의 ‘주체’와 ‘자주’가 아니라 독재자 자기 자신의 ‘주체’와 ‘자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누구도 간섭하지 말라’는 뜻을 ‘주체’와 ‘자주’로 포장했을 뿐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대체로 비슷한 시기에 ‘소비에트 제국’의 일원으로 평가되던 루마니아의 최고 지도자 니콜라에 차우세스쿠가 소련의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낸다는 뜻에서 호의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때에도 양호민 교수는 단호하셨습니다. 제 국민에 대한 탄압을 간섭하는 것에 저항하는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해석하시면서, 어느 경우에도 권력자가 ‘외세배격’을 부르짖을 때는 내부탄압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훗날 유신체제 때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의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을 ‘내정간섭’이라고 맞받아치고 민족주의적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반발했을 때도 양호민 교수는 같은 해석을 제시하셨습니다.

셋째,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하면서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했습니다. 이때 동국대학교 권윤혁 교수님이 출강하시고 「독재정치론」을 강의하셨는데, 이분은 자신이 대구대학 교수 때 ‘민족적 민주주의’의 틀을 만들어 박정희 후보에게 제시했고 그것이 인정돼 동국대학교로 옮겨올 수 있었다고 솔직히 고백하면서, 우리 민족이 앞으로 살 길은 바로 ‘민족적 민주주의’라고 역설하셨습니다. 서구식 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

하나만 붙들고는 민족이 살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남북을 통튼 우리 민족 스스로의 철학을 세워야 한다고 부연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 화두만 던지겠습니다. 권 교수의 주장에 엿보이듯,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토양이 비옥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관찰입니다.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나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유민주주의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유산계급 또는 부르주아지는 자신들의 재산과 특권을 지키기 위해 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기에 편한 선거와 의회에 기초를 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장차 사회주의 심지어 공산주의로 넘어가기 위한 첫 단계로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이 땅에서 자유의 풍토는 척박하다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화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3. 박정희 대통령의 통일관 재음미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의 통일관을 다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간간이 나타났듯, 1963년 대통령선거를 통해 공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한 박정희는 초기에는 통일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행보를 취했습니다. 1964년 가을 어느날 ‘춘천 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北)이 줄기차게 광범위한 남북교류를 제의하고, 남(南)의 정치권에서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을 뿐 아니라 심지어 “내가 대통령이 되면 김일성과 회담하겠다”는 제의마저 공식적으로 제기되자 태도를 바꿔 통일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명한 전환은 1966년 6월 3일 ‘유성 발언’에서 나타났습니다. 충청남도 유성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통일문제에 대해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리지 말고 태산같이 버리고 있어야 한다”는 이순신 장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통일논의를 1970년대 후반까지 연기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우선 요구되는 과제는 경제건설이며 경제건설을 통해 국력을 신장시켜 대한민국의 국력이 북한의 그것을 압도할 때 비로소 통일논의가 가능하다고 부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유성 발언’에 대한 반응은 찬반을 포함해 여러 갈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치부 기자로 접촉하고 있던 정치인과 지식인의 대부분은 냉소적이었습니다. “이건 아예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반(反)통일세력을 대표하고 있다”는 비난마저 뒤따랐습니다. 제 주변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 대통령이 통일문제를 도외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69년에, 그것도 3·1절을 기해, 행정부의 한 부서로 국토통일원을 개설해 북한문제와 통일문제 연구를 본격화시켰습니다. 국토통일원은 이후 통일원으로 또 통일부로 이름을 고치면서 오늘날까지 존속하는 가운데 많은 실적을 쌓았고 남북대화에 필요한 요원들을 많

이 키웠습니다. 저도 국토통일원 이후 통일부에 이르기까지 통일정책자문위원으로, 통일정책평가위원으로, 또는 통일교육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제 졸견을 제시하기도 했고 또 배우기도 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박 대통령의 통일관이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경제력은 북한의 그것에 훨씬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김일성의 1인독재체제가 만들어낸 공고한 사회통합을 유지하고 있었음에 비해 남한은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의 경제력을 중심으로 한 국력을 키우고 그 바탕 위에서 사회통합을 충실화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4. 미국 유학 시절의 공부

저는 1967년 여름에 세상을 놀라게 한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대남공작단사건」에 무고하게 연루되어 옥살이를 하면서 중앙정보부에서 고문도 당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미국 유학을 서둘러 준비하고 1년 뒤에야 겨우 신원조회를 통과해 여권을 받아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저에게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었으며, “국가는 지배계급의 폭력적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어느 마르크시스트 학자의 명제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우선 오하이오주 켄트시의 켄트주립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한국전쟁 발발 이전의 중국·북한관계: 중공은 왜 한국전쟁에 개입했는가?」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데 이어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시의 피츠버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아시아 세력균형 속에서의 코리아 통일」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두 곳에서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전쟁하말미에 수록한 「발문: 6·25전쟁에 관한 저자의 학문적 관심의 성장과정」에서 자세히 설명했기에 여기서는 중복을 피해 네 가지에 대해서만 짧게 말하겠습니다.

첫째, 6·25전쟁에 대해서입니다. 특히 피츠버그에서 공부할 때, 이 전쟁에 관한 ‘좌파 수정주의학파’의 저술에 접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의 책임을 스탈린과 모택동 그리고 김일성이 아니라 트루먼과 맥아더 그리고 이승만에 돌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저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했고 여러 권위있는 책들을 출판했지만, 6·25전쟁을 비록 어려서나마 직접 겪었던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프랑스의 세계적 철학자들인 사르트르 그리고 메를로퐁티가 은근히 소련과 북한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인 사실을 확인했을 때 “과연 세계적 철학자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둘째, 마르크시즘과 세계 공산주의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이 주제에 관해 정말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르크시즘과 관련해, 존 채프먼 교수로부터 “마르크스의 철학은 본질적으로 휴머니즘이다”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콜럼비아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소련의 정치와 외교를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고, 역시 콜럼비아대학교 경

제학과에서 소련의 경제를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은 부인과 함께 피츠버그대학교에서 봉직하셨습니다. “마르크스의 철학은 서양철학사의 한 큰 줄기인 휴머니즘에 충실한 것인데, 그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레닌과 스탈린 등 소비에트 권력자들이 스승의 철학을 철저히 왜곡했다”라는 가르침은 양호민 교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저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셋째, 중국의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어윈 술만 교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역시 콜럼비아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으로 모택동을 비교적 좋게 평가하셨습니다. 이분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중공을 봉쇄할 것이 아니라 외교적 승인을 통해 국제사회로 끌어내 국제사회의 규범에 맞게 행동하도록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같은 발상을 제시하셨습니다.

실제로 닉슨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헨리 키신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을 국제사회로 끌어내기 위한 외교교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1972년 2월 닉슨대통령의 중국방문과 모택동과의 회담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때 발표된 상해공동성명은 국제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한반도와 관련해 1972년 7월 4일 역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를 이끌어냈습니다.

넷째, 1962년 가을에 발생한 쿠바미사일사건을 둘러싼 케네디행정부의 대소협상을 분석한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의 명저 *윤경정의 핵심혜* 관한 카를 베크 교수의 강의였습니다. 베크 교수는 듀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동유럽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었는데, 케네디행정부가 소련의 흐루쇼프를 상대로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핵전쟁의 위기를 해소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련의 양보만이 아니라 미국의 양보도 있었음을 강조한 앨리슨 교수의 분석에 공감하셨습니다. “협상성공의 요체는 상대방에게 일방적 양보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신도 양보하는 데 있다”라는 말씀은 지금도 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15.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의 연구

통일문제에 대한 성찰을 여유 있게 다시 할 수 있었던 계기는 독일 훔볼트재단에 의해 마련됐습니다. 1988년 5월 1일부터 1989년 2월 28일까지 10개월에 걸쳐 독일에서는 뮌헨대학교 동유럽연구소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는 빈대학교 국제법연구소를 오가며 동서독관계와 오스트리아중립화에 대해 연구하도록 배려해 준 것입니다. 이때의 연구에 대해 이미 글을 썼기에 여기서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서독관계는 남북한관계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동서독 모두 분단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나치독일의 2차대전 도발에 대한 ‘형벌’로 연합국이 자신을 분단시킨 만큼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독에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아예 없었으며, 동독에서는 “차라리 분단의 공식적 인정 위에서 동서독 ‘국가연합’을 실현하자”고 제의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양자 사이에는 통

일실현의 한 방법으로서의 전쟁도 없었습니다.

다만 분단이 너무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서독에서는 특히 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접촉하면서 변화하고 변화하면서 접촉하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동서독이 서로 접촉하면 그 접촉을 통해 각자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그 변화에 바탕을 두고 또 서로 접촉하면 다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며 그렇게 접촉과 변화가 계속되면 자연스럽게 통일을 실현시키는 ‘수렴’이 발생할 것이라는 믿음을 지녔던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에 감명을 받았으며 남북한관계에 적용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뮌헨대학교에서 기초적인 공부를 마무리하고 빈대학교 국제법연구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빈대학교 국제법연구소에서는 2차대전의 패전국으로 연합국에 의해 분할점령됐던 오스트리아가 10년 만에 연합국과 오스트리아 사이의 오스트리아국가조약을 통해 중립화의 조건 아래 주권을 회복한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중립화가 국제적 합의에 따른 국제조약으로 성사됐기에 국제법연구소가 그 연구를 주관한다는 소개도 흥미로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짧게 말한다면, 오스트리아의 중립화통일은 연합국 분할점령 때 수도 빈에 오스트리아인에 의한 단일한 중앙정부가 세워졌기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반도 경우와의 큰 차이였습니다. 한반도에는 한인에 의한 단일한 중앙정부가 없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2차대전 이전에 여러 정당 사이에 내전이나 다툼없는 심각한 갈등을 겪다가 나치독일에 합병됐고 그리하여 전범국가가 됐기에, 이러한 전철을 다시는 밟지 말자는 합의가 오스트리아 지도자들 사이에 성립됐으며, 그래서 분할점령기와 그 이후 시기에 내쟁이 극소화됐던 것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와 다른 점이었습니다.

16. 탈공산주의 과정의 헝가리와 유고슬라비아를 여행하면서

탈공산주의 과정의 헝가리와 유고슬라비아를 여행하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하는 과정에 훔볼트재단의 배려로 그때 막 탈(脫)공산주의의 길에 들어섰던 헝가리와 유고슬라비아를 여행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 현실에 접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공산주의와 그 지도자를 비웃는 농담 또는 조크의 만연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여전히 연방을 유지하던 유고슬라비아의 경우, 사실상 종주국 노릇을 하던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유고슬라비아의 ‘국부’ 티토에 대한 조롱에 자주 접했으며 티토의 고향으로 유고슬라비아에 속해 있던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에서는 주로 자본주의경제학을 가르치는 케네디경제대학이 신설되어 있고 적지 않은 수의 청년들이 미국식 경영학석사학위를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에 접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수도 부다페스트 근교의 낙농농가에서 민박을 했는데, 거기서 삼성 텔레비전과 냉장고를 발견하곤 경탄했습니다. 그들은 엄지손가락을 번쩍 들며 “삼성이 최고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때 저는 어떤 뚜렷한 이론적 근거없이 그저 느낌으로 동유럽에서 공산주의는 붕괴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어서 논문으로는 발표하지 못하고 짧은 글로 1989년 여름 어느 시점에 윤중양일보에 발표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이 글을 읽은 몇몇 지식인들은 “야! 공산주의가 왜 붕괴해. 너 잘못 보아도 한참 잘못 보았구나”하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훔볼트재단은 2010년 여름에 우리 내외를 베를린의 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로 보내주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한국어를 수강하는 유럽학생이 100명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놀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삼성을 비롯해 유럽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현지법인에 취업하기 위한 필수적 예비작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매판’으로 매도되던 이 기업들이 ‘매판’이 아니라 한국경제를, 더 나아가 한국의 기적을 견인한 힘이었음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학문적으로 말한다면, 한때 유행했던 ‘종속이론’으로가 아니라 ‘따라잡기(catch up)’이론으로 한국경제의 성장·발전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매듭을 지으면서: 잠정적인 생각들

이미 많은 얘기를 늘어놓았지만, 시간이 허용한다면 더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여기서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랜 과정을 뚫으면서 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989년 가을 동독인들 스스로가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리고 이어 1990년 가을에 동독정권을 해체시키면서 서독으로 합류해들어감으로써 통독을 실현시킨 사변은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세계적 역사학자로 케네디정부에서 주일대사로 봉직한 에드윈 라이샤워 하버드대 교수는 독일통일은 불가능하지만 한반도통일은 머지않아 실현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우리나라 유력일간지는 그러한 메시지에 고무되어 신년호에 그의 인터뷰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던 1965년 신년호를 기준으로 말할 때, 독일은 24년 뒤 ‘미션 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이라고 불리던 그 과제를 평화롭게 외교적으로 해결했습니다만, 한반도통일은 56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요원하기만 합니다.

여기서 잠시 전후 미국외교의 대전략가로 꼽히던 조지 케넌 교수를 떠올리게 됩니다. 훗날 소련대사와 유고슬라비아대사를 역임하는 그는 이미 1947년에 소련은 태생적으로 ‘악(惡)의 존재’이며 소련지도자들은 절대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련에 대한 봉쇄정책을 제의했습니다. 1981~1989년 재임했던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그의 관찰에 공명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공개적으로 규정하고 소련의 붕괴를 위한 대전략을 구사했으며, 결과적으로 소련은 1991년에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통독을 비롯해 ‘소련제국’에 속했던 동유럽의 공산정권들은 모두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독일통일을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한 대전략의 산물로만 보자

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통일과 관련해 간과해서는 안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독이 통일이라는 명분을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해, 개인적 자유 또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원리를 조금이라도 희생시키게 될 통일이라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신념을 견지했습니다. 저는 이 신념의 연장선 위에서 결국 동독을 서독으로 합류해 들어오도록 하는 형태로 통독이 이뤄졌다고 믿습니다.

서독은 그러한 신념을 지키면서 자신을 민주와 복지와 평화의 ‘매력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표현으로 서독은 스스로를 자력(磁力)이 아주 강하고 자장(磁場)이 아주 넓은 ‘자석(磁石)’으로 키웠습니다. 그 거대한 자석이 발생한 자력에 의해 동독이 통독의 자장으로 끌려들어왔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상기하고자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독이 “우리는 결코 나치의 계승자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주변국가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국제사회 전반에 심어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노력이 쌓이고 쌓여 국제사회는 서독을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평화국가로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통독이 되면 강력해진 새 독일은 또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지난날의 우려를 버린 채 통독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무엇일까요? 만일 한반도의 통일이 개인의 인권과 재산을 짓밟는 1인독재체제의 존속이나 또는 그 잔여의 유지를 의미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서방국가의 지지를 결코 받지 못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통일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독일의 통일을 오랫동안 반대해 온 소련에서 고르바초프와 같은 개혁적인 정치가가 나와 기존의 대내외정책을 수정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북한에서도 역사의 흐름에 역류하는 세습체제, 심지어 3대에 이르는 세습체제에서 벗어나고 인민의 삶에 보다 충실한 개혁적 지도자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1당독재체제를 유지하는 중국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과 비록 공산주의는 포기했다고 해도 사실상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푸틴의 러시아연방공화국에서 민주화의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할 지도자가 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오늘날 김정은체제의 북한을 대함에 있어서 과연 민족주의라는 명분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인지 진지한 토론이 요청됩니다. 북한주민은 분명히 우리와 역사 및 문화 전통을 공유한 같은 민족입니다. 따라서 대다수 북한주민을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에서 접근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김정은 및 김정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권력자들과의 관계는, 서독의 유명한 반(反)나치 지도자였으며 사회민주주의자였던 쿠르트 슈마허의 표현을 차용한다면, 아벨과 카인같은 관계가 아닌가 두렵습니다.

김정일체제도 그러했지만 김정은체제 역시 끊임없는 핵개발을 통해 획득한 핵무장력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위협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기 위

해 북한정권이 아무리 ‘악한 존재’일지라도 협상으로 유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론에도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의 한 수단으로 북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베풀어야 한다는 입론에도 역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외교사를 보면 평화를 얻기 위해 상대방에게 재정적 지원을 베푼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돈으로 산 평화’라고 부릅니다.

저로서도 ‘돈으로 산 평화’의 불가피성을 지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핵전쟁 위기가 심각해지면 결국 남과 북은 햄릿의 운명으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염려됐기 때문입니다. 새삼 설명하지 않더라도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은 결투에서 승리한 주인공 햄릿은 물론이고 등장한 주요인물 모두가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승자고 패자고 관계없이 모두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이 희곡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것입니다.

‘피로스의 승리(Pyrrhic Victory)’라는 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고대그리스에서 피로스1세는 로마군을 상대로 싸워 승리했지만 희생이 너무나 커서 그 승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만일의 경우 한반도상황에 강대국이 개입하고 거기에 말려들어 남북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비록 대한민국이 승리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피로스의 승리’로 귀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우도 가져봅니다.

셋째, 우리의 형제인 북한주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탈북’ 그 자체를 우리 손으로 봉쇄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북한정권은 자신의 궁극적 붕괴를 유도할 수도 있고 최소한 정권의 기반을 침식할 수 있는 탈북을 막으려고 하고 이것을 남한이 받아들이는 것은 북한정권의 붕괴와 침식을 유도하는 작업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비난이 두려워 탈북을 우리 스스로가 막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국가 아니라는 인상을 깊이 심어줄 수 있습니다.

넷째, 진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우리가 해양국가의 일원이라는 지정학적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해양국가와 친하게 지냈을 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발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비록 원한이 남아있다고 해도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제의를 반복하는 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이제까지 한 말에 비해 너무 싱거운 것같은 결론을 제시해보겠습니다. 통일에 대한 이상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여전히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국민가요가 유효합니다. 그러하기에 통일을 향한 걸음이 아무리 더디고 힘들다고 해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족주의’ 또는 ‘같은 민족끼리’ 또는 ‘우리끼리’라는 감성적인 용어에 흔들려 현실에 눈을 감아서 안 될 것입니다. 무리하게 서둘러서도 안 되겠습니다. 특히 “내 임기 안에 통일을 성취하거나 그렇지 못하다면 최소한 ‘국가연합’이라도 성사시켜놓자”는 목표는 수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논문

- 북핵, 남북 통일 주제의 네 편의 연결 논문.

- 1) 남북한통일문제 접근법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성찰
- 2) 북한의 핵개발과 신냉전
- 3) 1950년대 북한의 핵과학 연구와 1960년대 북한의 핵개발 토대 구축:
소련의 대북한 지원과 관련하여
- 4) 국제관계의 전환점에서 제6공화정 출범(1988년) 이후 역대 정부가 추진한
대북·통일정책을 재평가하면서 그 변화의 방향을 모색해본다.

남북한통일문제 접근법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성찰

김학준(단국대학교 석좌교수)

1. 인사말

국내외 저명한 학자를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

남북한관계가 매우 어려운 국면에 직면한 오늘날, 시기적절하게 남북한통일문제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를 마련해준 인천대학교 통일·통합연구원 박제훈 원장님.

저에게 기조연설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통일에 관한 일반적 이론'

남북한통일문제 연구자들은 일정하게 다음의 두 가지 이론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통일에 관한 일반적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접근과 궁극적 통일에 관한 이론'입니다.

에트지오니의 이론

'통일에 관한 일반적 이론'으로 우선 아미타이 에트지오니(Amitai Etzioni) 교수가 제시한 이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트지오니에 따르면, 통일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은 '규범적 힘(normative power)' '보상적 힘(neumerative power)' '강제적 힘(coercive power)'의 셋입니다.

'규범적 힘'은 명분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그러므로 통일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구호가 바로 '규범적 힘'을 동원하려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1950년대 말에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모든 아랍인들의 단일국가 수립을 지향하면서 부르짖었던 구호, "우리 아랍민족은 하나의 통일국가를 세워야 한다."가 바로 그 한 보기입니다.

그는 1958년에 시리아를 끌어들이어 함께 통일아랍공화국(United Arab Republic)의 성립을 선언함으로써 자신이 추구해온 목표의 일부를 달성할 수 있었으나 결국 1961년에 시리아가 탈퇴하면서 해체됩니다.

'보상적 힘'은 '실용적 힘(utilitarian power)'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통일을 하면 이러저러한 경제적 이득이 온다."는 논리로써 통일을 유도하는 경우가 그 보기입니다.

'강제적 힘'은 무력을 말합니다. 군사력으로써 통일을 성취할 때 그것은 바로 '강

제적 힘'에 의한 통일인 것입니다. 1990년대에 북예멘이 군사력으로써 남예멘을 통합한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의 경우, 초기에는 이 세 힘 모두가 고려됐습니다. 첫째, “우리 한민족은 동질성이 강한 단일민족으로 단일한 언어를 쓰고 있고 5000년의 공통된 역사적 전통을 유지해 온 만큼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호소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둘째, 남농북공(南農北工), 곧 남한은 농업지역인 데 비해 북한은 공업지역인 만큼 통일을 해야 상호보완을 통해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남북 사이의 경제교류와 경제협력이 구상되기도 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통일에 앞서 ‘남북경제공동체’를 발족시키자는 구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셋째, 북진통일론과 같이 군사적으로 통일을 성취하자는 논리였습니다. 북한이 말했던 ‘조선혁명론’도 면밀히 분석해 보면 결국 폭력으로 통일을 성취하자는 논리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기능주의 및 신기능주의 이론

‘통일에 관한 일반이론’으로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론은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기능주의(functionalism) 및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 이론입니다. 기능주의 이론은, 어느 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성과를 나타낼 때 그것은 다른 분야에 대해 ‘과급효과(spill-over)’를 발생시키며 그 ‘과급효과’는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미친다는 이론입니다. 그러한 ‘과급효과’가 여러 많은 분야에서 축적될 때 통합이 이뤄진다고 기능주의자들은 예견합니다.

이에 대해, 신기능주의자들은 국가의 역할을 중시합니다. 통합을 추진하는 단위들에서 어느 한 쪽에서라도 정부가 더 이상의 진전을 막으려고 하면 통합은 진전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초에 남북대화가 시작됐을 때 정부는 기능주의이론에 입각해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기능주의이론은 결국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접근(gradual and step by step approach)’을 선호하기 때문에 남북대화의 급속한 진전을 바라지 않았던 정부의 입장에 맞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북한은 자신의 전략적 계산으로부터 남북대화의 급속한 전개를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정권 차원에서 남한에 대한 비난을 거듭하며 대화를 중단하자 그 사이 조금씩이나마 진전된 교류와 협력을 백지로 돌려버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3. 자본주의체제와 공산주의체제 사이의 통일 또는 협상에 관한 이론

수렴설 대 이산설

남북한통일문제에 접근하는 이론적 근거들과 관련해, 저는 ‘통일에 관한 일반이

론'에 이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접근과 궁극적 통일에 관한 이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수렴설(收斂說, Theory of Convergence)과 이산설(離散說, Theory of Divergence)을 토론하고자 합니다.

자본주의의 타도를 부르짖는 공산주의가 등장한 이후 학자들은 두 상극적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살핀 뒤 두 개의 서로 상반되는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수렴설입니다. 두 이데올로기가 현 단계에서는 서로 용납이 되지 않고 있으나 자본주의국가와 공산주의국가 모두 공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결국 공업화가 요구하는 어떤 공통점에서 만나 수렴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쉽게 말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공업화 과정에서 서로 변화하면서 어느 공통지점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는 낙관론입니다.

둘째, 이산설입니다. 두 이데올로기는 생래적으로 상극적이기 때문에 대립한 채 떨어져 있게 될 것이라는 비관론입니다. 비관론이라는 말 대신에 현실론이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꼭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수렴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체제를 상대로 대화와 협상을 벌이는 정책을 중시합니다. 반면에 대체로 이산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체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자본주의 쪽으로 접근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한 이후 남한사회에서는 좌우합작 그리고 남북협상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이론가가 이동화 교수였습니다. 동경제대 법학부 정치학과에서 마르크시즘을 전공한 그는 수렴설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래서 미국도 변화하고 소련도 변화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그렇다면 좌우합작과 남북협상이 실현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가 당시 건국준비위원회를 이끌던 여운형에게 수렴설을 설명하며 좌우합작과 남북협상의 길에 나서도록 권유한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리가학과 대 알타학과

러시아에서 1917년에 '혁명' 또는 '쿠데타'를 통해 볼셰비키체제가 성립됐을 때, 미국은 그것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불한당들의 집단'으로 간주했으며 그래서 외교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를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러시아 이웃 발틱연안에 위치한 국가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Riga)주재미국공사관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훗날 미국 외교계의 또는 국제정치학계의 지도적 인물로 자리를 잡은 조지 케난(George F. Kennan)이 1931년부터 여기서 근무했습니다. 리가주재미국공사관의 외교관들은 볼셰비키체제가, 그리고 그 연장선 위에서의 소련이 '생래적으로 부정직하고 불성실하며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와 안전 그리고 협력관계를 이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견해를 갖는 사람들을 묶어 우리는 리가학과라고 부릅니다.

다른 한편으로, 소련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와 안전 그리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련이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서서히 변화해 왔으며, 또 2차대전 때 미국과의 군사협정을 통해 나치독일의 패망에 일정하게 기여했고 무엇보다 2차대전이 끝난 이후의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예견하며, 소련과의 협력체제구축을 제의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1945년 2월 소련의 알타에서 열린 미국·영국·소련의 3개국 정상회담 때 미국이 소련에게 많은 양보를 했다고 비판을 받는 알타협정의 체결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리가학파의 입장이 옳은 것이냐 또는 알타학파의 입장이 옳은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소련의 붕괴 그리고 동유럽 공산체제의 붕괴에 기여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리가학파적 사고방식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는 소련을 ‘악(惡)의 제국’이라고 간주하고 붕괴 쪽으로 유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꼭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에 대해 리가학파적 발상을 갖는 사람들이 있고 알타학파적 발상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자는 북한을 불신하고 북한과의 협력에 비판적이면서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붕괴만이 남북한통일을 가져온다는 믿음을 갖는 반면에, 후자는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 남북의 통일을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의 해법

공산국가와의협상에 대한 사례들 가운데 하나로 유명한 사례가 1962년 10월에 발생한 쿠바미사일 위기의 해소를 위한 미국의 소련과의 협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1962년 10월의 어느 날 케네디 대통령은 맥조지 번디(McGeorge Bundy)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소련은 쿠바 안에서 장거리 공격용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곧바로 비공개 속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으며, 강경파는 즉각 쿠바 내의 소련미사일기지를 폭격할 것을 제의했으나 케네디는 그 방법은 미·소관계를 완전한 파국으로 몰아넣을 것이며 결국 미·소 핵전쟁을 유발할 것이라는 논리로써 거부했습니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련의 미사일을 탑재한 소련의 선단이 쿠바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10월 22일에 케네디 대통령은 방송을 통해 미국은 “핵무기를 탑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소련의 선단이 쿠바해역의 입구에 도달하면 ‘격리(quarantine)’시키겠다”는 취지의 미국정책을 밝힘으로써 사실상 소련선단의 쿠바접근에 대한 봉쇄의 의지를 선언했습니다.

- 흐루쇼프 소련공산당 제1서기 겸 소련내각 총리는 10월 26일에 “미국이 카스트로정권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한다면 소련은 미사일기지건설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이어 10월 27일에

는 “미국이 소련을 염두에 두고 터키 북부에 배치한 미국의 핵미사일을 철수시킨다면 소련은 쿠바에 미사일기지건설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 10월 28일에 케네디 대통령은 흐루쇼프의 첫 번째 제의를 수락한다고 공개발언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제의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 월터 리프먼(Walter Lippmann: 1889~1974)은 『뉴욕헤럴드트리뷴(New York Herald-Tribune)』에의 고정칼럼(Today and Tomorrow: 오늘과 내일)을 통해 케네디 대통령에게 터키 북부로부터 미국의 미사일을 철수시킬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 소련과의 협상을 성사시킬 것을 권고 했습니다.

- 결국 흐루쇼프는 10월 28일에 쿠바 안의 소련미사일기지를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로써 약 2주간에 걸친 초긴장상태가 해소됐습니다. 미국은 조용히 터키 북부로부터 미사일을 철수시키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쿠바미사일위기 해법을 북한과의 관계에 적용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발상을 검토해보게 됩니다. 거칠게나마 그 사람들의 발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북한의 체제붕괴를 시도하지도 유도하지도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주는 것입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에 제도적으로 응해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종전선언’일 수도 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평화협정’의 체결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주한미군의 철수를 약속하고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쿠바미사일위기 해법이 북한과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은 계속해서 남습니다. 우선 북한은 ‘체제보장’을 우리 대한민국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정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74년 이후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정부는 관여할 자리가 없다고 일관되게 말해왔습니다. 이어 주한미국의 철수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단독으로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리가학과의 입장에 선다면 북한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이므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이 확실하게 담보되기 이전에는, 그리고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 사이의 정세인식의 일치와 합의가 전제되기 이전에는 거론하기조차 어려운 문제입니다.

서독의 동독에 대한 접근정책: 이른바 서독의 동방정책

서독정부는 1969년에 사회민주당과 자유민주당의 연정이 성립돼 사회민주당 의장 빌리 브란트가 총리에 취임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1970년부터 이른바 동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태두리 안에서 동독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때 서독정부가 사용한 구호가 “접촉하면서 변화하고 변화하면서 접촉한다.”였습니다. 이 구호에 깔려 있는 것은 서독이 동독에 대한 접촉을

확대하면 동독이 변화할 것이라는 발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발상 아래, 서독정부는 동독을 상대로 많은 경제지원을 베풀었으며 문화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서독으로부터 자유세계의 정보가 동독으로 많이 흘러들어갔으며 그리하여 동독국민들 사이에서는 서독에 대한 선망이 확산됐고 그 선망은 동독국민들의 서독으로의 합류를 뒷받침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돼야 할 것은 서독정부의 동독에 대한 경제지원은 모두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비밀리에, 다시 말해 의회가 모르게 또 국민이 모르게 정부 마음대로 동독에게 돈을 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정부도 북한을 상대로 “접촉하면서 변화하고 변화하면서 접촉하자”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주장에 대해 일정하게 동의합니다. 그러나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앞에서 지적했듯 북한에 대한 지원은, 특히 경제지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헬싱키 프로세스

2차대전의 종전 30주년인 1975년 7월에 2차대전에 참전했거나 관여했던 유럽과 북미의 35개국이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유럽의 안전과 협력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함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회의는 앞으로의 행동지침 10개 항목을 채택하면서 1975년 8월 1일에 「유럽안전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회의가 1995년 1월 1일에 「유럽안전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로 재출발하게 됩니다.

헬싱키회의가 채택한 10개 항목의 행동지침은 단순화시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성됐습니다. 하나는 동유럽에 대한 소련의 기존 지배권을 추인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권문제와 정보교류를 강조한 것입니다. 앞의 것은 소련을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뒤의 것은 서방권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보교환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는지 모니터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기 때문에, 서방권은 소련을 압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결국 이 조항으로 소련 및 동유럽에는 서방의 정보가 계속해서 흘러들어갈 수 있었고 소련 및 동유럽에서의 인권탄압을 견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련 및 소련권 전체의 붕괴를 유도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헬싱키프로세스를 북한에 적용해보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상당히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주장으로 비칩니다. 문제는 북한이 헬싱키프로세스가 자신의 붕괴를 유도하는 ‘트로이의 목마(Trojan Horse)’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북한은 한국을 비롯한 어떠한 나라 어떠한 단체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북한으로의 정보유입을 철저히 차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 맺는 말씀

이제 제 기조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의 통일은 이제 에트지오니가 말한 ‘규범적 힘’으로 실현시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니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호소에 그 이전 세대에 비해 훨씬 덜 움직입니다. 그들은 대체로 남과 북이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더구나 북한은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등장한 이후 자기네를 ‘김일성민족’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우리를 상대로 말할 때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용어를 자주 씁니다만, 북한 내부에서는 ‘김일성민족’이라는 말을 주저없이 씁니다. 이 사실도 우리가 간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둘째, ‘보상적 힘’의 호소력은 더더욱 약해졌습니다. 이제는 한반도가 ‘남농북공’의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농업국가가 아니며 공업화위에서 세계적 무역국가를 이룩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과연 얼마나 더 큰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물론 한때는 ‘통일대박론’이 나오기도 했고 지금도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안정된다면 남북 사이에 경제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남과 북 모두에 이익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저는 그 전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앞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북한 핵 위협의 해소입니다.

셋째, ‘강제적 힘’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구나 북한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핵무기를 개발했음을 현실로 받아들일 때 남에 의해서건 북에 의해서건 ‘강제적 힘’을 통해 통일을 실현시키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한반도에 시급한 과제는 북한핵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과정에는 대한민국정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여기지 않겠다는 태도를 때때로 보이는 김정은정권에 대해 우리는 낙관적으로만 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인천대학교 통일·통합연구원 주최 한반도통일문제세미나(2019년 11월 7일)에서 발표한 논문

북한의 핵개발과 신냉전

김학준(단국대학교 석좌교수)

오늘날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은 북한의 핵개발이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북한 비핵화이다. 이 과제는 넓게 보면 남과 북을 통틀어 한민족 전체의 과제이고 동아시아의 과제이면서 세계적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면 북한의 핵개발은 현재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북한의 핵개발이 진행되어 온 과정을 먼저 살피도록 하겠다.

북한은 6·25전쟁을 겪으면서 서방세계의 핵무기에 대해 공포심을 갖게 됐고, 그리하여 1950년대 후반부터 핵무기 개발에 관심을 쏟아 꾸준히 발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소련의 견제를 받기도 했지만 때로는 기초적인 지원을 받기도 했다.

북한의 핵개발은 비록 더디기는 했지만, 1980년대에 이르러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진전됐다. 평안북도 영변에서의 대규모 핵연구시설의 건설이 그 대표적 사례였다. 여기서 미국은 소련을 통해 북한에 강력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1985년 12월 12일에 북한으로 하여금 핵확산방지협정(NPT)에 가입하게 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핵개발이 정지된 것은 아니었다. 북한은 은밀하게 영변을 중심으로 핵개발을 진전시켰으며, 이 사실은 1989년 초에 미국의 고고도 인공위성을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북한이 대한민국과 함께 1991년 12월 31일에 한반도비핵화선언에 서명한 데 이어 1992년 1월 7일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상당히 불식될 수 있었다.

1992년 후반과 1993년 전반에 상황은 반전됐다. 핵확산방지협정과 핵안전조치협정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핵시설을 사찰한 데 이어 의심이 가는 곳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자 북한은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1993년 3월 12일에는 핵확산방지협정으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한 것이다.

출범한 때로부터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1차적으로 영변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검토했으나 역시 출범한 때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은 김영삼 대통령의 반대로 그 안을 포기하고 대신에 북한을 상대로 하는 협상에 들어갔다.

여기서 우리가 상기해야 할 사실은 북한이 1974년 3월에 최고인민회의의 결의를 통해 밝힌 ‘조선의 평화’에 관한 기본입장이다. 김일성의 ‘교시’에 따른 이 결의는 ‘조선의 평화’에 관한 문제, 보다 구체적으로, 1953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는 북한과 미국 두 나라 사이의 문제이며 한국은 참여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19년 만에 이 기본입장을 관철시킨 것이다.

한국이 배제된 채 제네바에서 진행된 협상은 1994년 10월 21일에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합의를 끌어내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2년 10월에 부시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의 공화당 행정부는 북한이 제네바협정을 사실상 파기한 채 고농축우라늄(HEU) 방식으로 핵개발을 진전시켜왔다고 주장하면서 제네바협정의 무효를 선언했다. 그 이후 몇 차례 남북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사이의 6자회담을 포함해 국제회담이 열렸으나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시키지 못했으며 오늘날의 시점에서 볼 때 북한은 약 50~70기의 핵탄두, 그리고 그 핵탄두를 운반할 수단으로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확보여부는 자신 있게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아마도 2~3년 안에는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써 ‘협박’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에 성공했음을 말해준다. 여기서 우리는 구 소련의 최고권력자 흐루쇼프 소련공산당 제1서기가 유럽의 서방 국가들을 상대로 펼쳤던 ‘인질외교’를 떠올리게 된다. 1957년에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다시 말해, 미국에 앞서 인공위성의 발사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발사를 성공시킴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한 흐루쇼프는 “우리가 비록 미국 본토는 공격할 수 없다고 해도 대륙간탄도 유도탄의 사거리 안에 들어있는 런던, 파리, 로마, 본 등은 언제라도 공격할 수 있다”고 협박함으로써 그 나라들을 마치 ‘인질’로 잡아놓은 것처럼 행동했던 것이다. 자연스럽게 겁을 먹은 그 나라들은 미국을 상대로 소련을 자극하지 않도록 호소하는 외교를 벌이기도 했다.

북한이 한국정부의 거둬진 호의 표시나 그것에 동반된 여러 형태의 대북 지원 제의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모욕하는 태도를 취하는 배경에는 한국은 이제 우리의 핵 인질이나 다름이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하겠다. 강경군부를 대표해 외무성에 취임한 매우 거친 자세의 리선권은 아마 앞으로 보다 더 노골적인 용어로서 그러한 인식을 언행으로 보여줄 것 같다.

그러면 이러한 위기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우선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오늘날 국제정치는 새로운 냉전에 직면해 있다는 냉혹한 현실이다. 지난날의 냉전이 미국과 소련 중심의 냉전이었고 그 냉전은 군사에 치중되어 있었음에 비해, 오늘날의 냉전은 미국과 중국 중심의 냉전이고 그 냉전은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있는 냉전이다. 지난날의 냉전에서는 양분론적 진영논리가 확연해 개별적 국가들은 어느 한 진영에 속하도록 강요됐지만, 오늘날의 냉전에서는 군사적으로는 어느 한 나라와 동맹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경제적으로는 그 나라와 경쟁관계 또는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와 협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처럼 오늘날의 냉전은 복합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 핵개발에 대한 해법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비록 그렇다고 해도, 정부는 무엇보다 북한 핵개발이 제기하는 위험성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 아가 북한 핵개발을 저지시키고 비핵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외교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없이는 한반도에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긴박감을 지닐 것이 요청된다. 거듭 말하건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낭만적이거나 심지어 환상적인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어 지난날의 냉전사에서 교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에서는 소련 또는 공산국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의 과제를 놓고 두 학파가 존재했다. 하나는 소련 또는 공산국가는 ‘생래적인 악(惡)의 존재’이므로, 철저히 봉쇄하고 심지어 붕괴시켜야 한다는 믿음이었다. 이 학파는 특히 소련 또는 공산국가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주목하고 그것을 폭로하는 데 힘을 기울였으며 서방세계의 정보가 그 나라들로 유입되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공화당 행정부의 레이건 대통령이 그러한 흐름을 대표했으며, 결국 그가 구사한 정책의 결과로 소련은 붕괴했으며 소련에 종속됐던 동유럽의 공산정권들 모두 역시 붕괴했다. 대체로 공화당 행정부가 이 믿음을 정책으로 반영하곤 했다.

다른 하나는 소련 또는 공산국가도 변화할 수밖에 없으며 미국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그 변화를 유도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공존할 수 있는 국제체제를 생성해야 한다는 믿음이었다. 대체로 민주당 행정부가 이 믿음에 근거해 ‘유화정책’ 또는 ‘관여정책’을 구사했던 것인데, 일정한 범위 안에서의 긍정적 산물이 있기도 했지만 대체로 속임을 당하는 결과로

귀결되기도 했다.

우리 한국의 경우에도 두 흐름이 교차했다. 한반도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특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서방학자들의 경고를 고려할 때, 한 흐름 만에 집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 3대 세습체제인 김정은정권에 이르러 그 폭압적 성격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으면서 동시에 내부적 취약성을 빈번히 드러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제 핵개발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핵보유국가로 인정을 받아 미국을 상대로 군축협상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김정은정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진지하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 화정평화재단(2020년 1월 20일)에서 발표한 논문, 『북핵 불모 대한민국: 전문가 32인 갈 길을 말하다』(화정평화재단, 2020), 308~315쪽에 재수록.

1950년대 북한의 핵과학 연구와 1960년대 북한의 핵개발 토대 구축 : 소련의 대북한 지원과 관련하여

김학준 단국대 석좌교수

1. 머리말

북한의 핵 개발은 1980년대에 시작됐다는 것이 하나의 통념으로 굳어져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통념에 대한 반론으로, 핵 개발의 전제조건인 핵과학 연구는 1950년대에 시작됐으며 핵개발 토대 구축은 1960년대에 이뤄졌다는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돌이켜 보면, 북한의 핵 개발에 관련된 기존의 저술들은 대부분 1980년대 이후 시기를 다뤘다. 그 이전 시기에 핵 개발과 관련해 북한이 취한 조치를 다룬 저술은 드물었다. 비록 있다고 해도, 이 주제에 관해 한두 줄로 소략하게 설명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지난 20년 사이에, 1980년대 이전 시기를 다룬, 특히 1950년대와 1960년대를 다룬 자료와 저술이 꽤 많이 출판돼 우리의 지식의 폭을 크게 넓혀주었다. 우선 자료에 대해 말한다면, 미국의 우드로윌슨 국제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산하 국제냉전사프로젝트(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CWIHP)가 발굴한 문서들과 박종철 외, 『헝가리의 북조선관련 기밀해제 문건』(선인, 2013), 그리고 북한의 서호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과학령도사』(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2002) 및 이정석·김성수 공저, 『21세기의 핵에너지』(평양: 금성청년출판사, 2010)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어 저술에 대해 말한다면, (i) 정현숙, 「1950~1960년대 북한의 '핵잠재력확보 전략'에 대한 연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정책의 지속과 변화를 중심으로」(『현대북한연구』 21권 2호, 2018), (ii) 김보미, 「북한 핵프로그램의 시작과 성장: 1950~1960년대를 중심으로」(『통일정책』 2권 1호, 2019), (iii) 이상택, 「북한 군사전략의 역사적 고찰」(『군사』 112, 2019)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소련과 동유럽 기밀문서에 접할 수 있었던 살롱타이(Balázs Szalontai), 래드첸코 (Sergey

Radchenko), 만수로프(Alexandre Mansourov) 등, 지난날 공산권에 속했던 학자들의 논문 역시 매우 유익하다.

필자는 북한 핵개발에 관해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었다. 필자의 이 기존 논문, 그리고 위에서 지적한 자료 및 저술을 바탕으로 표제의 주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2. 1950년대 미·소 경쟁 속에서의 소련의 북한에 대한 원자력 지식 지원 그리고 그것에 바탕을 둔 북한의 핵과학 연구 출발

6·25전쟁과 김일성

1945년 8월 6일과 8일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원자폭탄을 투하해 일본의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2차 대전을 종결시키는 것을 목격한 소련은 스탈린의 직접 지시에 따라 원폭개발에 모든 힘을 기울여 1949년 8월 29일 원폭실험에 성공할 수 있었다. 소련은 미국에 뒤이어 1953년 8월 12일 수소폭탄 실험에도 성공했다.

수소폭탄은 차치하고, 원자폭탄의 위력을 당시 북한의 김일성 수상이 어떻게 인식했는가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다. 다만 위에서 말한 『21세기의 핵에너르기』가 있을 뿐인데, 이 책은 김일성이 소련의 원폭실험 성공을 대함에 있어서 핵무기 그 자체보다 핵에너지가 발생시키는 경제적 효과를 더 중요하게 인식했음을 보여주었다.

러시아인 국제정치학자 만수로프에 따르면, 6·25전쟁 이전 시기에 김일성은 북한에 풍부하게 매장된 우라늄 광석 등을 소련에 수출했는데, 이 광석은 핵폭탄의 하나인 우라늄탄 제조에 필수적이었다. 이것을 소련에 팔았다는 사실은 그가 핵무기 그 자체에 대해 무지하기도 했고 관심이 없기도 했음을 보여주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또는 핵개발에 관심을 쏟던 스탈린에 대한 충성의 표시였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게 한다.

원폭에 대한 김일성의 이러한 인식은,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공통적으로 지적했듯, 6·25전쟁을 겪으면서 크게 바뀐 것으로 보인다. 1950년 11월 30일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핵을 ‘무기의 하나’

라고 부르면서 한국전에 핵무기 사용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사실, 1950년 12월 24일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이 한국전에 참가한 중공군을 격퇴시키기 위해 원자탄 사용을 트루먼에게 건의한 사실, 1951년 4월 5일 미국 합동참모회의가 중공군의 대규모 월경이나 소련 폭격기의 공격이 있을 경우 핵으로써 보복할 것을 검토한 사실, 맥아더가 해임된 뒤 후임 리지웨이 사령관 역시 원폭 사용을 건의한 사실, 그리고 1953년 초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교착상태에 빠진 휴전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원폭 사용을 고려한 사실—이 모든 것들을 보도를 통해 알게 된 김일성은 긴장감과 위기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점과 관련해, 2016년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주영북한공사가 6·25전쟁을 계기로 김일성은 원자탄에 집착하게 됐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전혀 과장이 아니었다.

원자폭탄이 불러일으킨 긴장감 또는 위기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북한의 정책으로 이어졌는가에 대한 해답을 현재로서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전쟁이 진행되고 있던 1952년 10월 「조선과학원」을 설립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11월 이 신설기관의 제1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원자력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12월 1일 이 기관 산하에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했다. 그는 이 연구소에 ‘공업·농업·의학 부문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연구’라는 과제를 부과했는데, 북한 스스로 ‘[북한] 과학의 최고 전당’이라고 부른 조선과학원은 핵물리학 연구와 핵무기 개발을 이끌어간다.

조·소 과학기술협력협정의 의미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성립됨으로써 김일성은 북한의 안보에 대해 어느 정도 안도할 수 있었다. 그러했기에 그는 그 동안 국정과제의 제1 순위로 내세웠던 ‘조국통일’보다는 ‘전후 경제복구와 경제건설’에 역점을 두는 새 정책을 공식 채택했다. 그렇지만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미국정부의 간헐적 언급, 예컨대, 덜레스 국무장관, 래드포드 합참의장, 아이젠하워 대통령 등 미국정부 수뇌부의 분쟁지역에 대한 전술핵사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 등은 ‘핵위협’을 더욱 실감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후 북한의 행보는 1954년에 조선인민군 편제 안에 「핵무기방위부 문」을 설치하는 조치로 이어졌으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1955년 2월 5일 소련과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5개년 협약」을 체결하는 조치로 이어졌다. 이 협약에는 ‘핵의 공동연구’를 비롯해 기술경험과 데이터 교환, 기술문서 이전, 기술전문가 교환, 기타 형태의 기술지원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면 소련은 왜 북한을 상대로 그러한 협약을 맺어주었던 것일까? 그 해답은 당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 아래 미국과 소련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특히 아시아·아프리카의 제3세계를 향해, 전개한 ‘핵기술 전파’ 경쟁에서 찾을 수 있다. 쉽게 말해, 미국이 그렇게 했듯, 소련 역시 자신의 진영 안에 이미 들어온 국가들의 이탈을 방지하거나 앞으로 끌어들여려는 국가들의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핵기술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이 사실은 북한의 핵 연구와 종국적 개발에 대한 소련의 지원이 소련의 세계정책에 연결되어 있었음을 말해주었다.

그 배경이야 어떠했던, 소련과의 이 협약을 계기로, 김일성은 원자력 연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다. 1955년 3월 과학원 총회에서 김일성은 원자력과 핵물리학에 관한 연구소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으며, 6월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동유럽 과학회의에 과학원 소속 6명의 과학자를 파견했다. 그는 이어 1955년 7월 1일 김일성종합대학에서의 연설에서 “현시기 과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데서 원자물리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 원자력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으며, 1956년 1월 21일에는 “[...] 원자력을 정치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시작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김일성종합대학 물리학부에 핵물리강좌가 개설되고, 과학원에 「원자 및 핵물리학 연구소」가 설립됐다.

두브나연구소 창립 참여와 전문가 파견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사망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난 1956년 2월 하순 모스크바에서 열린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서기 흐루쇼프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연설

을 했다. 그는 우선 스탈린의 폭압통치 그리고 거기에 수반됐던 1인 개인숭배를 통렬히 비난했으며, 이어 소련은 핵전쟁을 피하기 위해 미국과의 평화공존을 추구할 것이라는 새로운 노선을 제시했다.

이 연설의 여파는 동유럽을 포함한 소련권 전체에 미쳤지만, 북한도 예외가 아니었다. 김일성은 그 사이 자신을 상대로 형성됐던 1인 개인 숭배에 일시적이거나 제동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흐루쇼프의 연설에 고무된 반(反)김일성세력이 자신에게 도전했을 때 제압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북한 내부에서의 권력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핵 분야에 있어서 북한의 소련과의 협력은 지속됐다. 우선 북한은 소련이 헝가리·폴란드·동독·루마니아·알바니아·체코슬로바키아 등 동유럽국가들 그리고 중공 및 몽골 등 동북아국가들과 함께 1956년 3월 26일 모스크바 근교의 두브나(Dubna)시에 「다국적 핵연합연구소(북한의 표현으로는 「연합원자핵연구소」, United Institute for Nuclear Research, UINR 또는 Joint Institute for Nuclear Research, JINR)를 세울 때 최학근을 비롯한 다수의 물리학자들을 파견했으며, 이 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 및 연구소 현장에 서명했다. 동시에 북한은 소련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북한은 곧이어 1956년 9월 23일 이 연구소에 가입한 국가들의 대표 회의가 두브나에서 열렸을 때, 과학자들과 당·정부요인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다. 북한은 석 달 뒤인 12월 3일 이 연구소에 정식으로 가입하고 비록 아주 미미한 액수였지만 분담금을 지불했다. 이렇게 볼 때, 1956년은 북한의 핵 연구 및 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였다고 할 것이다. 어떤 북한전문가들은 1956년을 북한 핵개발에 있어서의 원년으로 보기도 한다.

소련, 북한의 핵 과학자 육성을 지원하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상기해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이 시점에 북한에 비록 극소수였지만 핵물리학과 원자물리학에 관련된 전문학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일제강점기에 교토제국대학 이학부에서 이론물리학을 전공한 도상록(1903~1990), 교토제국대학에서 공업화학을 전

공했으며 이학박사학위를 받은 리승기(1905~1996), 그리고 한인석 등은 모두 해방 직후 서울의 대학들에서 가르치다가 6·25전쟁 발발을 전후한 시기에 월북해 모두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로 봉직했는데,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이는 도상록이었다. 학계에서는 이 세 사람을 북한에서의 핵 연구와 개발의 제1세대라고 부른다.

그들은 곧 두브나에서 연수를 받고 귀국한 신진 연구자들과 함께 핵 물리학 또는 원자력 연구를 진행시켰다. 두브나 그리고 소련에서의 연수는 소련이 연수계획을 중단시킨 1990년까지 계속되는데, 그 사이 연수를 받고 귀국한 250~300명의 과학자들이 제2세대 및 제3세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북한 핵개발의 중추를 담당했다. 제2세대를 대표하는 과학자가 최학근으로, 그는 1986년 12월 정무원의 원자력공업부 부장으로까지 승진해 1990년대의 핵 개발을 이끌어갔다. 서상국 및 정근 등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북한이 소련의 「다국적 핵연합연구소」와 협력관계를 세운 때로부터 3개월 뒤인 1956년 12월 25일 「과학발전10개년전망계획(1957~1966)」을 발표하면서, 과학원 산하에 「과학발전10개년전망계획작성위원회」를 조직했다. 이 계획에서 주목되는 것은 ‘원자력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거기에는 원자력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실제로 이 계획 아래, 북한은 1차적으로 소련에서의 연수를 통해 많은 핵물리학자 또는 핵과학자들을 길러냈다.

원자력 또는 핵과학에 관한 북한의 소련과의 협조는 1957년 10월 11일 두 나라 사이의 「과학원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로 이어졌다. 6개월 뒤인 1958년 4월 북한은 주소대사 리신팔 등을 통해 소련 외무장관 그로미코에게 핵의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원자력개발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보미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때는 시기적으로 조·소관계가 악화되기 전이었고, 북한지도부가 핵무기 개발이 아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요청한 터라 소련도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1959년 9월 북한과 「핵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해 원자로 건설 및 핵폐기물저장실험실 건설 등을 포함해서 서로 연결된 프로젝트의 비용을 감당해주었다.

이 협정이 북한에 준 혜택은 컸다. 이 협정에 근거해, 두 나라는 「9559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에 따라 두 나라 전문가들은 공동으로 북한의 지질을 연구한 뒤 소련의 지원 아래 세워질 원자력연구소의 건설부지로 평안남도 영변을 선정할 수 있었다. 소련은 1개월 뒤 북한의 과학원이 헝가리 과학원 및 체코슬로바키아 과학원과 각각 「과학원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여기서 강조될 점이 있다. 그것은 이상에서 살핀 소련의 대북지원은 북한의 핵개발 그 자체를 지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소련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미국의 경쟁을 염두에 두고 지원한 것이었고, 그 규모도 소련이 여타 사회주의 국가에 제공한 지원에 비해 아주 작은 것이었다. 김보미 박사의 표현으로, “소련의 입장에서 북한이 핵기술 지원대상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이유는 없었다.”

3. 1960년대 중·소분쟁 속에서의 소련의 대북지원 감소 그리고 북한 스스로의 핵기술획득 시도

남한에서의 반복적 군사정권의 출범과 북한의 대응

1960년대에 들어와 북한의 핵과학정책 또는 핵개발정책에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 변화는 북한이 자기의 든든한 후방지원국으로 여기고 있던 소련과 중공 사이의 ‘분쟁’이 점점 뚜렷해지는 현상으로 시작됐다. 소련이 1956년의 흐루쇼프 연설을 계기로 미국과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데 대해 중공이 그것을 ‘수정주의’로 단정하며 반발하면서 1958년부터 ‘이념논쟁’이 전개된 것이다.

국제주의운동권이 균열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 남한에서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반공적·반북한적 군사정변이 성공했다. 김일성은 곧바로 위기를 느끼고, 이틀 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를 열어 국방력강화 방침을 채택하면서 국방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해 1961년을 기점으로 추진되고 있던 7개년경제계획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김일성은 곧이어 7월과 8월에 소련과 중공을 차례로 방문해 각각 상호방위협력조약을 끌어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김일성은 원자력

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61년 9월 11일에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를 열고, ‘원자력공업을 통한 인민경제의 발전’이라는 지침을 제시했으며 이 지침에 근거해 원자력 분야의 중추적 지도 기관으로 원자력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소련의 대북 원자로 지원

중·소분쟁 속에서 김일성은 서서히 중공 쪽으로 기울어지면서도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중·소분쟁에서 북한이 아주 중공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소련은 1962년에 북한에 IRT-2000 연구용 원자로에 관한 기술과 장비를 제공했으며, 핵시설 건설에 필요한 기술 등을 제공하기 시작해 1962년에 북한 최초의 원자력연구소인 원자력 발전소가 영변과 박천에 설립될 수 있었다. 북한 스스로는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대학에 각각 핵물리학원을 세워 핵 분야의 과학자와 기술자를 길러내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소련이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위기’ 때 자신이 비밀리에 쿠바에 구축한 미사일기지를 철수시키라는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최후통첩을 받아들였을 때, 중공의 마오쩌둥은 물론 김일성 역시 이것을 ‘미 제국주의에 대한 굴복’으로 여기면서 크게 반발했다. 그 이후 북한의 중공편향은 두드러져 소련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에 이르렀다. 소련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중공은 자신의 원폭개발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했으며, 1964년 10월 16일 원폭실험에 성공했다.

김일성은 중공에 원폭개발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나눠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공은 그 요청을 거절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널드 오퍼도퍼가 지적했듯, 김일성은 핵무기 자체 개발에 깊은 관심을 갖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관심은 1964년에 국방과학원 및 핵물리학연구소를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분쟁 속에서 북한이 중공 쪽으로 기울었는데도, 소련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아주 끊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액수와 지원은 크게 줄었다. 1963년에는 2MWt급 IRT-2000 연구용 원자로에 관한 기술과 장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쳤다. 1963년분이 1965년에 하나의 원자로로 완공된 뒤 1967년에 정상가동됐다. 정현숙 박사가 적절히 지적했듯,

“이로써 북한의 원자력 정책은 연구에서 실행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대체로 1966년 후반에 들어서서 북한은 다시 소련 쪽으로 기울었다. 이에 따라, 1967~69년에는 소련으로부터 함대함 미사일, 지대지 로켓, 해안방위미사일 등을 제공받았다. 이것들을 기초로 삼아, 북한은 1960년대 말기에 핵개발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다.

4.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듯, 북한은 핵 개발을 1950년대부터 소련의 지원 아래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소련의 지원이 크게 줄어들면서 자신의 자원을 동원해 핵 개발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다.

여기서 덧붙일 것이 있다. 필자의 앞에서의 설명을 읽은 독자들 가운데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에 나서게 한 것이 아니었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느 무엇보다도 소련의 지원과 동의 아래 김일성이 1950년 6월 25일에 남침을 개시하고, 중공군까지 끌어들여 전쟁을 장기화시켰음을 상기할 때, 그리고 그렇게 하고도 훗날 대남적 화전락을 포기하지 않고 갖가지 무력도발을 저질러왔음을 생각할 때, 원천적 책임은 김일성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핵을 쓰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남이든 북이든, 또는 미국이든 핵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비록 지루하고 더디다고 해도 외교와 협상을 통해 해결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 편, 「집요했던 북한 핵개발」, 『기로에 선 북핵: 바이든 시대 전문가 진단』(동아일보사 부설 화정평화재단, 2020), 228~240쪽에 수록된 논문(제목은 편집자가 바꾼 것이다).

국제관계의 전환점에서 제6공화정 출범(1988년) 이후 역대 정부가 추진한 대북·통일정책을 재평가하면서 그 변화의 방향을 모색해본다.

김학준/단국대 석좌교수

I. 들어가는 말

2021년 1월 19일에 미국에서 조지프 바이든(Joseph Biden)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제관계에는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우리의 관심을 한반도에 국한한다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이끌었던 공화당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취했던 ‘일면강경(대북제재) 일면대화(김정은과의 정상회담)’로부터 벗어나 ‘대체적 강경(대북제재) 부분적 대화(실무회담)’의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의 정권교체를 앞둔 시점인 2021년 1월 5~1일에 북한은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를 열고 이제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으로 불리던 김정은을 그것보다 위상이 더 높은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함과 동시에 자신이 ‘핵보유국’임을 선언했다. 여기서 북한은 김정은지도체제가 내부적으로 아무런 동요가 없는, 쉽게 말해 ‘붕괴’되지 않을 안정된 체제임을 과시하면서,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한을 상대로 핵군축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중요한 전환의 시점은 2017년 5월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이름 아래 북한에 대해 ‘전면적 유화’의 길을 걸어온 문재인정부가 임기를 15~16개월 남겨놓은 시점이어서, 과연 문재인정부가 자신의 잔여임기 동안에도 한국 우파·보수세력과 우방 대부분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그 노선을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물음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바이든정부의 공식 출범 직후, 문재인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바이든정부는 곧바로 북핵을 ‘미국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견해를 밝힘으로써 양자 사이에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인상을 주었다.

이러한 분기점에서, 필자는 문재인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국한하지 않고 1988년 2월에 출범한 제6공화정 이후 존속한 노태우정부(1988. 2. 25 ~

1993. 2. 24), 김영삼정부(1993. 2. 25 ~ 1998. 2. 24) 김대중정부(1998. 2. 25 ~ 2003. 2. 24), 노무현정부(2003. 2. 25 ~ 2008. 2. 24), 이명박정부(2008. 2. 25 ~ 2013. 2. 24), 박근혜정부(2013. 2. 25 ~ 2017. 3. 10), 그리고 문재인정부(2017. 5. 10 ~ 현재) 등 일곱 정부가 취한 대북·통일정책의 기본 성격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필자는 33년에 걸친 제6공화정 아래서의 이들 정부가 추진한 대북·통일정책이 결국 대한민국의 생존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북한핵개발의 저지와 포기를 핵심으로 하는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을 크게 제고시켜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이제는 대북·통일정책의 역점을 북한의 핵 도발과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에 두는 쪽으로 옮기는 것이 요청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II. 기존 대북·통일정책 수립과 집행의 요인 (1): 대통령의 사명감 또는 명예욕 그리고 국내 사회심리적 분위기에 대한 인식(노태우정부~문재인정부)

우선 일곱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된 요인을 살피기로 한다. 여기서 먼저 지적되어야 할 점은 토론의 대상인 일곱 정부는 그 이념적 지향에 있어서 ‘우파·보수정부’(노태우·김영삼·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좌파·진보정부’(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로 나뉠 수 있고, 같은 ‘우파 보수정부’라고 해도 각개의 정부 사이에 차이를 나타내며 역시 같은 ‘좌파·진보정부’라고 해도 각개의 정부 사이에 차이를 나타낸다는 사실이다. 그 점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큰 테두리 안에서 그들의 정책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발상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통일성취에 대한 사명감 또는 ‘통일의 디딤돌을 놓은 대통령’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기대하는 명예욕

제6공화정 출범 이후 역대 정부가 입안하고 추진한 대북·통일정책에는 역대 대통령의 사명감 또는 명예욕이 짙게 깔려있다. 대통령이 되면 통일성취를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심리를 갖게 되며, 동시에 “내가 통일의 디딤돌을 놓은 대통령이다” 또는 “내가 분단체제를 깨뜨림에 있어서 대돌파(大突破)를 연 대통령이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역사에 ‘통일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는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예외가 없었다.

남북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역대 대통령들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집착했다. 그것은 우선 국내외 언론매체로부터 화려한 관심을 받기 마련이어서, 정치인이라면 물론이고 특히 대통령이라면 누구나 기대하고 선호하는 이벤트가 아닐 수 없다. 때로는 국내적 위기를 미봉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노벨평화상을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공적인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었음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다.

대통령이 그러한 사명감 또는 명예욕을 갖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세계의 많은 정치지도자들에게 공통되는 것은 사명감 또는 명예욕이다. 그것이 있었기에 역사적 책무를 기꺼이 진 사례는 참으로 많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도, 노벨상 수상자가 될 수 있다는 ‘허영심’에서 정통 외교·안보 참모들의 건의를 경시한 채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 임했다는 뒷말이 따랐다. 더구나 우리의 경우 남북분단을 해소하고 조선=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통일마저 성취할 수 있다면 그 사명감 또는 명예욕은 오히려 칭찬을 받을 만하다. 그러나 “정치는 결과로써 말한다”는 격언이 가르치듯, 사명감 또는 명예욕을 넘어서서 허영심에 사로잡혀 국내외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설익은 발상으로 조급히 일을 추진하다가 오히려 대한민국과 그 국민에게 위협과 부담을 안기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통일지향적 민족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인식

이 시기의 정책참여자들은 남한의 사회심리적 분위기가 대체로 ‘통일지향적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으며 정부는 그 분위기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을 다음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제3공화정과 제4공화정으로 이어진 박정희정부는 국정과제 설정에 있어서 경제발전과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하고 통일을 부차적 과제로 설정했다. 박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통일논의 연기’를 제의했으며, 특히 제4공화정 때는 6·23선언(1973년)을 통해 한반도 분단을 사실상 합법화 또는 제도화하고자 했다. 쉽게 말해, ‘2개의 코리아’정책을 공식적으로 추진했던 것이다. 이것은 북한으로부터는 물론이고 국내의 반정부세력으로부터 “박정희정부는 분단을 고정화시키려는 반(反)통일세력이며, 따라서 타도돼야 한다”는 비난을 불러 일으켰다.

제5공화정의 대북·통일정책은 단순화시켜 말해 이러한 비난에서 벗어나겠다는 심정에서 출발했다. 남북정상회담 제의(1981년)로부터 시작해 통일헌법제정 제의(1982년)를 거쳐 이산가족남북교환방문(1985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던 일련의 제의들은 모두 자신이 결코 반통일세력이 아니며 ‘통일지향적 민족주의세력’임을 과시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발상

역대 대통령 및 행정부에 공통되는 발상들 가운데 하나는 북한에 대한 지원, 특히 경제지원 그리고 북한과의 인적·물적 교류는 북한의 내부에 자극을 주어 종국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발상이었다. 이 발상을 상징하는 용어들 가운데 하나가 ‘선공후득(先供後得)’이었다. “당장의 댓가를 바라지 않고 우선 제공하면 뒤에 가서 얻는 것이 있다”는 뜻이었다.

서방권 일각에서는 ‘트로이의 목마(Trojan horse)’라는 말을 썼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트로이를 공격하던 아카이아연합군은 견고한 트로이성(城)을 함락시키기 어려워지자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Ulixes)의 지휘 아래 커다란 목마를 만들고 그 안에 오디세우스를 포함한 정예병 30명을 몰래 잠복시킨 뒤 트로이에게 바쳤는데,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트로이가 목마를 입성시키자 그들은 일제히 뛰어나와 성문을 열어 연합군이 입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것은 물론 연합군이 트로이를 함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고사를 떠올리면서, 서방권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적·물적 제공을 통해 폐쇄적인 북한의 문을 열 수 있으며 종국적으로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됐다. 미국 클린턴정부의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에는 이 발상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 역대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이 발상이 주류를 형성했다. 다만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및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경우에는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는 하되 붕괴로 유도하는 것을 지향하지는 않았다.

북한은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를 비롯한 서방권의 대북경제지원에는 북한을 변화시키고 종국적으로 붕괴시키려는 속셈이 깔려있다는 의심을 품었다. 그 의심에서 나온 말이 ‘독(毒)이 든 사과’였다. 대북경제지원에는 ‘독’이 들어있어서 선불리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자기 나름의 경계심이었다.

Ⅲ. 기존 대북·통일정책 수립과 집행의 요인 (2): ‘통일지향적 민족주의’에 대한 좌파·진보정권의 해석(특히 문재인정부)

자신이 '통일지향적 민족주의세력'임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욕구는 제6공화정 출범 이후 일곱 정부 모두에서 대북·통일정책 수립의 출발점으로 굳어졌다. 달리 말해, 민족주의를 대북·통일정책의 기조로 삼은 것이다.

이것은 특히 반미적·친북적 성향을 지닌 운동권세력의 지지 위에 성립된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및 문재인정부 등 '좌파정부'에서 더욱 그러했으며, 민족주의를 반미적·친북적 이념과 동일시하면서 민족지상주의에 기울어진 문재인정부에 이르러 정점에 도달했다. 그들의, 특히 문재인정부에서 대북·통일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핵심부의 이론적 출발점은 다음과 같은 역사인식의 산물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현대사에 대한 '좌파'적 또는 '좌파수정주의'적 해석

(i) 그들은 조선=한국 근현대사의 비극은 일제의 식민지배였으며, 따라서 조선=한국은 일제패망과 더불어 그 잔재를 철저히 청산했어야 했는데, 일본을 점령한 미국이 소련과의 대결을 염두에 둔 냉전논리에서, 전후일본이 배태하고 있던 좌파혁명을 예방하고 일본 자체를 친미화하기 위해 전쟁주도세력을 매우 제한적으로 처벌하고 그 대부분을 전후일본의 재건세력으로 키워주는 정책을 추진했다는 해석으로부터 출발한다. 미국은 그러한 정책의 연장선 위에서 자신이 점령한 남한에서도 지난날 일제에 협력했던 '친일반민족세력'을 남한의 주류세력으로 육성함으로써 친일파가 친미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했고 그 결과 친일=친미파가 주류세력을 형성해 남한사회를 지배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식한다. 여기서 좌파세력은 남한에서의 주류세력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류세력교체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ii) 같은 맥락에서, 조선=한국 근현대사의 또 하나의 비극을 분단으로 여기는 그들은 이 분단의 1차적 책임을 미국에 묻는다. 소련이 조선=한반도의 동북부로부터 진공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미국은 이 반도 전체가 소련에 의해 점령되고 공산화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한민족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38도선에서의 분할 그리고 그 이북에서의 소련점령과 그 이남에서의 미국점령을 제의해 실현시켰다고 해석한다.

(iii) 미국에 대한 비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마치 전후일본에서 "좌익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듯, 남한에서도 이미 잉태한 좌익혁명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군정기에 항일독립운동=민족주의운동에서 중심을 이뤘던 조선공산당 지도자들을 포함한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했다고 그들은

본다.

이러한 시각의 연장선 위에서, 그들은 미국이 군정을 끝낸 이후에도 오랜 기간에 걸쳐 남한에 ‘좌파·진보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막으려 했으며 그 수단 의 하나로 ‘극우적 친미’ 군사지도자들의 쿠데타를 지원하거나 용인했다고 이해한다. 특히 1980년에 일어난 신군부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탄압은 미국의 용인없이는 사실상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참극을 계기로 제4공화정 때 성장하던 반정부적·반체제적 운동권세력은 빠르게 성장했으며 특히 그들을 중심으로 반미정서가 확산하게 되었다.

(iv) 그들은 남한의 주류세력이 된 친일=친미세력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줄 분단체제에 안주하면서 북한과의 화해 그리고 종국적인 통일을 꺼리거나 반대하는 반통일세력이 됐으며, 자신들의 입장을 반공주의로 포장하는 가운데 반공주의를 반대세력, 심지어 민주화운동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했다고 인식한다. 반면에, 그들은 민족주의세력=사회주의세력은 통일을 지향했지만 반공주의에 의해 탄압을 받고 희생됐다고 인식한다.

여기서 그들은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이승만 대통령을 ‘분단을 추구한 대표적 지도자’로 폄하하고, 1948년 봄에 평양에서 열린 남북지도자회의에 참석한 김구와 김규식을 높이 평가한다. 특히 김구를 통일지향적 민족주의운동의 상징으로 떠받든다.

(v) 이러한 인식은 남한의 역대 정부가 표방한 반공주의는 통일지향적 민족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제1공화정 때는 물론이고 특히 제3~제4공화정 때는 독재체제를 뒷받침하는 상징 조작(象徵操作)이 반공주의였으며, 이것은 북한과의 협력과 화해 그리고 궁극적 통일을 저해하는 이념적 장애물이라고 그들은 인식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은 반공주의가 미국의 국가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남한사회 주류계급의 친미노선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반공주의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국가보안법 그리고 박정희정부의 반공법 및 사회안전법이었다고 인식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박정희정부 그리고 이후의 보수정권이 반공주의의 실효성과 실적을 과시하기 위해 자주 ‘간첩사건’ 또는 ‘용공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한다. (반공법과 사회안전법은 제5공화정 출범 직후 국가보안법에 통폐합됐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보안법이 북한과의 화해 및 통일을 추구하는 노력에 장애가 되며 따라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듯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4일에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제2항에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

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다짐했는데, 이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여기서 상기돼야 할 점은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도 그러했지만 더더욱 문재인정부에서는 대북·통일정책 입안과 추진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들이 거의 모두 과거 보수정권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됐고 복역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공안기관에서 고문을 당하기도 했으며, 자신들을 투옥시킨 사건은 공안당국에 의해 과장됐거나 심지어 조작됐고 그런데도 사법부는 자신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믿음을 지녀 공안기관과 사법기관에 대해 깊은 불신을 갖고 있다. 그러한 불신은 ‘보수·우파’ 세력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갖는다. ‘보수·우파’ 세력은 국가보안법으로 상징되는 반공주의적 국가강압기구에 의해 보호를 받고 육성됐다고 그들은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한 인식은 ‘좌파·진보정부’의 대통령들 스스로 자신들의 체험을 통해 공유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시절에 북한에 대한 접근정책을 제시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의 혐의를 받았고 중앙정보부에 의해 도쿄에서 납치되기도 했으며 신군부 출범 직후에는 내란선동의 조작된 혐의로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한 경험을 갖지는 않았다. 그러나 모두 변호사로 ‘용공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들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보수정권이 발표한 ‘간첩사건’ 또는 ‘공산주의운동사건’이라는 것은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압하고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조작이며 따라서 그러한 사건들을 조작한 공안기관과 조작에 활용된 국가보안법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

(vi) 그들은 6·25전쟁에 대해서도 역대 보수정부가 제시한 해석과 대조되는 해석을 제시한다. 그 전쟁은 조선왕조 이래, 그리고 일제식민통치 및 미군정을 거치면서 누적된 계급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혁명세력’ 곧 북한과 그 해결을 막기 위한 ‘반(反)혁명세력’ 곧 남한 사이의 ‘내전’이었는데도, 남한이 ‘미제국주의’를 끌어들이었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그들은 북한이 선제공격을 함으로써 이 전쟁이 시작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김일성에게 책임을 묻는 보수·우파적 해석을 배경한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유엔 깃발 아래서의 미국의 군사개입도 비난한다. 그때 미군참전이 없었다면 한반도는 ‘혁명세력’인 북한에 의해 통일됐을 것이며, 자연히 친일=친미로 이어져 내려온 ‘반(反)민족적·반(反)통일적 분단안주세력’이 ‘숙청’된 뒤 조선=한반도 전체에서 사회주의적 변혁이 실현됐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vii) 그들은 6·25전쟁이 휴전으로 매듭지어진 직후 한국과 미국 사이에 성립된 한미군사동맹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한미군사동맹조약은 ‘동족’인 북한을 대한민국의 가상적(假想敵)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이 조약을 유지한 채 북한과의 화해 및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모순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이러한 인식에는 미국을 ‘외세’로 그리고 북한을 ‘우리 동포’로 여기는 민족주의 또는 민족지상주의가 깔려있다.

한미군사동맹과 관련해, 그들은 한국과 미국이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대통령은 소련을 상대로 상상을 뛰어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군비경쟁을 일으켜 소련으로 하여금 자신의 힘에 부치는 부담을 떠안은 채 어쩔 수 없이 대응하게 만들어 소련의 국내경제를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소련의 붕괴를 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한은 이 사실에 주목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정례적인 한미군사훈련이 북한으로 하여금 역시 자신의 힘에 너무나 부치는 부담을 떠안은 채 어쩔 수 없이 대응하게 만들어 북한의 국내경제를 더욱 악화시켜 궁극적으로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끈질기게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지를 요구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viii) 그들은 1965년에 성립된 한일기본관계조약을 통해 한국이 우리의 적국이었던 일본을 우리의 동포인 북한에 함께 대항하는 ‘우방’으로 인정한 것도 잘못이라고 본다. 또 한국이 베트남전쟁에 파병한 것도 잘못이라고 본다. 베트남전쟁은 기본적으로 제국주의·식민주의세력에 대항해 투쟁했던 북베트남 민족주의세력이 제국주의·식민주의세력에 협력했던 남베트남 반민족주의세력을 제거하고 통일을 성취하려고 한 내전이었는데, 한국이 미국의 ‘지시’에 따라 참전해 반민족주의세력을 도왔던 것은 도덕적으로 부당했다고 인식한다. 이 참전을 활용해 몇몇 한국 기업은 크게 성장할 수 있었으며 ‘베트남 특수(特需)’는 한국경제의 성장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한국이 비도덕적인 방법을 통해 ‘축재’했으며 이것은 다시 한국의 기득권세력의 지위를 강화시키는 데 이바지했을 뿐이라는 논리로써 비판한다.

(ix) 그들은 남한에 존속했고 북한에 존속해 온 독재체제가 남북분단으로 말미암아 조선=한반도의 성립된 ‘분단구조’ 또는 ‘분단체제’의 특수성 위에서 성장했다고 주장한다. 쉽게 말해, 이승만 독재체제와 박정희 독재체제 그리고 전두환 독재체제 모두 북한의 대남군사위협 및 공산화시도를 내세우고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 강력한 반공정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명분을 강화할

수 있었고, 김일성에서 김정일을 거쳐 김정은에 이르는 북한의 일인독재체제 역시 남한 및 미국의 대북군사위협을 앞세우고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 ‘수령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명분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인식하면서, ‘분단구조’ 또는 ‘분단체제’의 해소, 곧 통일은 남과 북 모두에서 독재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믿는 것이다. 여기서 “통일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좋다”는 장준하(張俊河)의 ‘통일지상주의’가 성립되고 오늘날 까지 계승되고 있는 것이다.

(x) 1980년대에 남한의 비판적 지식인들 가운데 좌파적 성격을 지닌 지식인들은 마르크스의 ‘사회구성체’론을 남한사회에 적용하면서 ‘사회구성체 논쟁’을 일으켰다. 이 논쟁은 우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이뤄졌다고 서방세계가 인정하는 ‘경제적 발전’ 또는 ‘한강의 기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남한을 ‘미제의 반(半)식민지’이면서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장악한 국가’로 파악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이론에 직접적 영향을 받은 대학생들은 ‘미제’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민족해방(NL)노선을 추종하면서 반미운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해 투옥되기도 했는데, 그들 가운데 일부가 문재인정부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다.

(xi) 종합적으로 말해, 그들의 역사인식 가운데 어떤 부분은 ‘우파·보수’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으며 반드시 비판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정부의 수립과정, 6·25전쟁, 그리고 한미동맹에 관한 그들의 해석은 전통주의적 이 아니라 ‘좌파’적 또는 ‘좌파수정주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온 국민 다수에게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북한에 대한 매우 긍정적·동정적 인식과 동조

한국현대사에 대한 ‘좌파수정주의’적 해석은 북한에 대한 해석에서도 그대로 들어난다. 위에서 부분적으로 지적됐지만 여기서는 ‘좌파·진보정부’ 특히 문재인정부가 지닌 북한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i) 그들은 우선 북한이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는 항일독립운동세력=민족주의세력에 의해 세워졌다는 해석을 앞세운다. 김일성이 일제강점기에 만주에서 그리고 이어 연해주에서 게릴라를 이끌고 항일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이 선전하는 그 내용에는 과장이 많으며 심지어 조작됐다는 의심을 받는 대목도 적지 않다. 그런데도 그들은 김일성의 무장항일투쟁을 지나칠 정도로 높이 평가한다.

항일독립운동을 강조하는 그들에게 중국공산당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공산당은 마오쩌둥의 영도 아래 일제에 대한 투쟁을 통해 승리함으로써

아시아에서 반제국주의운동의 정신적 지주가 됐다고 인식한다. 오늘날의 시대상황을 ‘미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의 시대로 오해하는 문재인정부 내부의 일부 세력 또는 외부의 일부 지지세력이 미국보다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호하거나 지지하는 까닭이다.

(ii) 그들은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립과정과 그 성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소련의 군사점령 아래 모스크바가 세운 계획에 따라 성립됐다. 그러나 이 측면은 사실상 무시된 채 김일성과 그의 게릴라동지들의 힘으로 성립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들은 소련의 군사점령 아래 1946년에 실시된 토지개혁을 높이 평가한다. 북한의 토지개혁은 일정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은 1950년대 중반에 들어와 협동농장체제를 채택하면서 이미 농민에게 나누어주었던 토지를 모두 국가로 귀속시켰다. 그들은 또 소련의 군사점령 아래 1946년에 실시됐던 8시간노동제를 포함한 일련의 ‘사회주의법령’을 높이 평가한다. 그렇지만 이 법령은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됐으며 북한주민은 과도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iii) 그들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높이 평가한다. 김일성이 ‘주체’를 내세우며 때로는 소련에 대항하기도 하고 때로는 중공에 대항하기도 하면서 ‘자주노선’을 추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내세운 ‘주체’는 민족의 주체도, 국가의 주체도, 그리고 인민의 주체도 아니라 일인독재자로서의 자신만의 주체에 지나지 않았다. 풀어 말해, “내가 하는 것에는 아무도 간섭하지 말아라” 뜻에서의 주체를 강조하는 것이다. 또 그가 내세운 ‘자주노선’ 아래 북한은 세계 최빈국들 가운데 하나가 됐으며, 이제는 일상화된 식량부족과 인민의 굶주림 그리고 ‘주체’나 ‘자주’와는 동떨어진 외부원조에 의존해야 하는 심각한 구조적 경제위기에 빠지게 됐다. 서구정치학의 용어를 빌린다면, 북한은 ‘실패한 국가(a failed state)’가 된 지 이미 오래이다.

(iv) 그들은 북한의 일인독재체제 및 김씨일가세습체제에 대해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는 자세를 취한다. 동서독시대에 동독의 이론가들이 동독을 옹호하기 위해 개발한 ‘내재적 접근방법’을 북한에 적용하면서, 북한에 대해 서구에서 개발된 자유 또는 자유민주주의 개념으로 분석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내재적 상황과 논리’를 고려하며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v) 그들은 한미군사동맹의 군사력이 북한의 그것보다 우월하다고 인식하고 또 미국이 한미군사동맹의 기초 위에서 북한에 대해 ‘재침’을 시도하고 있다는 북한의 해석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미국의 군사위협에 직면해, 자체의 힘으로 자위(自衛)를 추구하게 되어 흔히 독제체제와 동일시되는 동원체

제 또는 병영국가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이해한다. 동일한 논리의 연장선 위에서, 그들은 북한이 '실패한 국가'가 된 한 원인이 한미군사동맹에 기초한 미국의 군사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힘에 벅찬 군사비 지출'에 있다고 인식한다. 역시 '내재적 접근방법'에 따른 인식인 것이다.

(vi)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핵위협에 대해서도 그들은 보수·우파의 전통적 해석과는 크게 대조되는 해석을 제시한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핵군사력으로써 북한을 위협하자 북한은 자위수단으로 마침내 핵무장을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그들은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려면 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 핵우산의 보호를 받는 남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조선=한반도 전역의 비핵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말해, 그들은 북한이 '포위되어 있다는 심리(seize mentality)'에 빠져있으며 핵무장을 비롯한 북한의 군사정책 및 군사시위는 이것으로부터 파생했다고 이해한다. 자연히 그들은 북한을 그러한 '포위심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 역시 '내재적 접근방법'의 산물이다.

(vii) 그러면 그 조치의 출발점은 무엇일까? 그들은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조선=한국정전협정에서 찾는다. 이 정전협정은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의 체결을 규정하고 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함으로써 조선=한반도에 '영구적 평화'를 실현시킨다는 미래상을 담았던 것으로, 그들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유엔을 대표한 미국(그리고 유엔군에 속해 참전한 남한), 중국, 북한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의한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상기해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북한이 1974년 3월에 미국을 상대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 협상'을 시작할 것을 제의하면서 이 협상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인 사실이다. 남한은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협상과정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뜻도 담았는데, 북한은 이제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노무현정부 때도 그러했지만, 문재인정부의 정책참여자들은 북한의 제의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미국과 북한이 직접 쌍무적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문재인정부는 그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주선하거나 중재할 뜻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그들은 평화협정 체결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우선 '종전선언'에라도 합의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종전선언’이 발표되거나 무엇보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남한 주둔의 명분을 잃게 돼 철수해야 한다는 여론에 직면하게 된다. 비록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북한을 가상적으로 상정하면서 성립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역시 존립의 정당성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북한은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철수 그리고 더 나아가 한미군사동맹의 해체를 지향하고 있으며, 문재인정부는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부터 공개적으로 드러난 한미갈등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서 찾아진다.

‘북한붕괴’론에 대한 거부 그리고 ‘북한생존지원’론에 대한 지지

북한에 대한 그러한 일련의 인식은 때때로 등장하는 ‘북한붕괴’론에 대한 비판 및 거부로 이어진다. 김일성이 사망한 직후 등장한 ‘북한붕괴’론은 적중하지 못했다. 북한은 특유의 내구력(耐久力)을 과시하면서 북한 스스로 ‘고난의 행군’의 시기로 명명한 수년에 걸친 혹독한 기아의 시기를 수십만 명의(어떤 이에 따라서는 수백만 명의) 아사 그리고 탈북현상 속에서도 그런대로 그럭저럭 넘겼다. 그 뒤에도 북한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북한붕괴’론은 다시 등장했고 이에 따라 ‘북한급변사태발생’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좌파·진보정권의 핵심적 인사들은 ‘북한붕괴’론 및 ‘북한급변사태발생’론을 거부하고 북한을 남한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급작스럽게 붕괴하거나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외세의, 특히 중국의 북한군사개입을 불러올 수 있게 되고 한반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개연성이 높은 만큼 북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뜻이다. 달리 말해, 북한에 대한 남한의 지원은 민족주의의 과시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그들은 판단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발상에서, 그들은 우선 북한붕괴의 단서를 열 수 있는 북한주민의 탈북과 남한으로의 입국을 억제한다. 노무현정부에서도 그러했지만, 문재인정부에서는 더욱 그러해 심지어 이미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북한송환을 시도했다. 문재인정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한의 탈북자단체가 북한의 김정은 독재체제를 비판하고 주민의 참상을 일깨우는 전단을 만들어 북한으로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2020년에 제정했다. 그들은 또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실시에 반대하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앞에서 지적했던 미국이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특히 문재인정부는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에 강하게 반발한다.

트럼프정부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희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여러 ‘당근’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제의해 유엔에서 통과시켰다. 이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채찍’이다. 이 ‘채찍’ 아래 북한은 무역을 포함한 경제 활동 전반에서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날 노무현 정부가 그러했듯, “제재는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논리로써 제재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 세계의 반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IV. 대북·통일정책에 있어서의 중심적 주제

이러한 기본인식을 갖고 제6공화정의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통일정책을 그사이 성립됐던 남북합의 또는 남북정상회담에 초점을 맞춰 재조명하기로 한다.

노태우 대통령 시기: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12월 13일) 및 「조선=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2년 1월 31일)

제13대 노태우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사에서 ‘민족자존의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민족주의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다. 그러한 정신 위에서, 그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하나가 되는 역사적 사변이 말해주었듯 동·서냉전이 해체되는 분위기를 적절히 활용하는 가운데 북한을 포함한 공산권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그것을 매개로 남북관계에 결정적 돌파구를 여는 것을 목표로 삼은 북방정책을 과감히 추진했다.

그 결과 남북관계의 역사에서 최초로 남북총리회담을 성사시킬 수 있었고 1991년 12월 13일에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할 수 있었으며 1992년 1월 31일에는 「조선=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할 수 있었다. 특히 후자에 관해 부연한다면, 당시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에 핵단지를 조성해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핵개발의 저지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돼야 할 점은 그가 한·미동맹을 존중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북방정책을 추진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정부는 노 대통령의 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다.

김영삼 대통령 시기: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제네바합의(1994년 10월 21일)

김영삼 대통령이 제14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취임사를 통해 “동맹보다 중요한 것이 민족이다”라고 선언해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민족주의의 흐름을 이어갔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제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곧바로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부터의 탈퇴선언으로 대응했다. 이 선언은 사실상 「조선=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무효화시키는 조치로 받아들여졌으며 이로써 제1차 핵위기가 조성됐다. 이때는 미국에서 빌 클린턴(William Jefferson Clinton)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정부가 출범한 때로부터 2개월이 막 지난 시점이었다. 당시 북한의 사실상의 실권자였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과 남한에서 정권교체가 발생함으로써 대외관계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문제에 대응할 준비가 미처 돼 있지 않은 시점을 택한 것이다.

클린턴정부는 위기의 수습을 위해 대한민국정부를 배제한 채 북한과 직접 협상에 들어가 1994년 10월 21일에 제네바에서 합의를 이룩했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핵무기개발에 관한 기본틀」이라는 협정이 바로 그것으로, 이 제네바협정을 통해 북한은 핵무기개발 포기를 약속하고 그 댓가로 미국은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게 경수로발전소를 지어주며 중유를 공급해줄 것을 약속했다. 북한은 자신이 핵무기 그 자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부족을 비롯한 에너지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다고 변명했으며, 클린턴정부는 이 변명을 받아들여 “그렇다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경수로 2기를 지어주고 중유를 공급해줄 터이니 원자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변의 중수로 원자로는 없애라”는 선에서 타협해,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기 위한 국제기구로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세웠고 실제로 이 기구를 통해 북한 함경남도 신포시에서 경수로 2기 건설작업을 계속했던 것이다.

이로써 북한핵개발이 제기한 위기는 일단 봉합될 수 있었다. 클린턴정부는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 국제사회의 여러 많은 문제들에 관여시키는 가운데 그 기본성격을 변화시킨다는 발상의 ‘관여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했다. 그러나 이 협정은 ‘아들 부시’ 곧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정부 때인 2003년에 파기된다. 클린턴정부의 대북정책을 ‘유화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불만을 표시했던 공화당정부는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 방식으로 핵무기를 만들고 있으며 북한의 이 행위는 제네바협정 위반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로써 경수로 건설은 완전히 중단됐고 중유공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네바합의가 이루어지기 3개월 전인 1994년 6월 28일에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역사에서 처음이 될 남북정상회담을 7월 25~28일에 평양에서 열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7월 8일에 김일성이 사망함에 따라 무산됐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등장했지만 국내문제에 전념하게 돼 김영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끝내 실현되지 않았다.

비록 남북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으나 김영삼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단호한 견해를 공식으로 표명했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는 악수할 수 없다”라는 그의 발언은 북한핵개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비쳤다. 그러나 그의 회고록에 따르면, 클린턴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을 ‘외과적 수술’로 제거하겠다는 뜻을 자신에게 전해왔을 때 자신은 그것이 북한의 남한에 대한 무력보복으로 이어지고 결국 한반도 전체에 전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해 반대했다.

김대중 대통령 시기: 제1차 남북정상회담(김대중·김정일)과 6·15공동선언

김대중 제15대 대통령은 1960년대 후반부터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여러 구상을 제시했으며,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부터 ‘햇볕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적극적인 대북접근정책을 추진했다. 그의 이 정책은 당시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정부의 대북봉쇄정책과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공화당정부와의 갈등을 겪으면서도, 우선 북한과의 합의 아래 1998년 11월 18일에 남한인의 금강산 관광을 실현시킬 수 있었다. 이것은 쉽게 말해 북한에게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외화의 공급을 의미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모든 힘을 쏟아, 2000년 6월 13~15일에 평양에서 김정일을 상대로 남북관계의 역사에서 최초가 된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이 회담은 6월 15일에 흔히 「6·15남북공동선언」 또는 「평양남북공동선언」이라고 불리는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했다. 5개 항으로 구성된 이 역사적 문서는 제1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선언해 민족주의의 이념을 강하게 표시했으며, 이후 남과 북에서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이 유행하게 됐다. 나머지 4개 항도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제2항이다. 이 항은 남한에서 좌파세력에 의해 “남북연합을 실현하자”는 운동의 원천으로 작용하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 우파세력에 의해 “남북연합은 대한민국 현행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

5개항 어느 곳에도 북한핵개발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해 두 정상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서울로 돌아온 뒤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말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용인하는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 제2차 남북정상회담(노무현·김정일)과 10·4공동선언

김대중 대통령을 이은 노무현 대통령은 적극적인 대북지원정책을 추진했으며 그 과정에서 북한과의 합의 아래 2004년 6월에 북한 개성특별시 관문구역 봉동리에 남한의 기업인들이 투자해 회사를 세우고 북한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업지구를 세울 수 있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개성공단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2007년 10월 2~4일에 평양을 방문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 회담은 8개 항으로 구성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채택해, 6·15공동선언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다. 첫째,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는 제3항과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제4항이다. 둘째,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제5항의 한 부분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문구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다. 이것은 이 시점에서 이미 확실하게 드러난 남과 북 사이의 현격한 경제격차를 ‘균형’의 방향으로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보다 더 쉽게 말해, 남한이 북한에 대해 엄청나게 큰 규모의 경제원조를 제공할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 선언에서도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명박 대통령 시기와 박근혜 대통령 시기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보고 남한사회 안에서는 특히 우파·보수세력을 중심으로 이 회담이 언술로는 화려했으나 실제로는 김정일의 독재자적 지위를 강화시켜주는 데 기여했고 더구나 김대중 대통령의 김정일에 대한 거대한 액수의 미화비밀송금에서 나타났듯 대북경제지원이 북한 핵개발의

비용으로 쓰였을 뿐이라는 비판이 확산됐다. 우과·보수세력의 적극적 지원 아래 출범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가 취한 대북지원정책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이명박정부의 경우는 금강산관광을 중단시켰으며 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의 전면적 철수를 단행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통해 발생한 이익이 북한의 핵개발 비용으로 쓰이는 만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뜻이었다.

이러했던 만큼,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밀사들이 오가는 것은 했으나 북한이 개최의 조건으로 요구한 액수가 너무 커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이로써 이 두 정부 때에는 남북관계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오히려 냉각되는 측면도 보여주었다,

문재인 대통령 시기 (1): 제1차 미북정상회담(트럼프·김정은) 및 제2차 미북정상회담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변화는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이뤄졌다. 무엇보다 북한이 1974년 3월 이후 줄기차게 요구해왔으며 남한의 '좌파·진보 정부'를 지지한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정상회담이 두 차례에 걸쳐 열린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지적한 문재인정부의 '중재외교'의 산물이기도 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제1차 회담을 2018년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제2차 회담을 2019년 2월 27~28일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한 것이다. 그러나 하노이회담 과정에서 트럼프가 북한이 핵개발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면서 퇴장함에 따라 두 나라 사이에는 실제에 있어 어떠한 의미있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다만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젊은 최고권력자를 국제사회의 큰 관심 속에 상대했다는 사실은 김정은의 국제지위 향상에 도움을 준 것으로, 무엇보다 중요하게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묵인해준 것으로 평가됐다.

문재인 대통령 시기 (2): 제1차, 제2차, 제3차 남북정상회담(문재인·김정은)과 9·19공동선언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 문재인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친 미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제1차 회담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측에 있는 평화의 집에서 열렸으며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이때 문 대통령은 북한의 획기적 경제발전에 관한 남한의 구상을 담은 USB를 넘겨주었는데, 여기에는 북한의 고질적인 전력부족을 포함한 에너지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구상이 담긴 것으로 알려

졌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공화당정부가 미북 사이의 제네바협정을 파기하고 경수로건설 및 중유공급을 중단시킨 것은 북한에 대한 약속위반으로 그 책임은 공화당정부가 주장한 것 같이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의 교체를 추구하던 공화당정부에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으로부터 문 대통령은 제네바협정의 뜻을 살리는 것이 남북관계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에 남한이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줄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그 행위를 ‘이적행위’라고 비난했다.

제2차 회담은 2018년 5월 26일 판문점 북측에 있는 통일각에서 비밀리에 즉석으로 열렸고 ‘판문점 선언’에 이행에 대하여 재확인했다. 제3차 회담은 2018년 9월 18~20일에 평양에서 열렸으며, 「9·19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6개 항으로 구성된 「9·19 평양 공동선언」의 경우, 다섯 분야에 대한 합의가 포함됐다. 이 문서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언급이 나타났다.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야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라는 제5항 그리고 그 5항에 부속된 3개항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북한의 비핵화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삼은 것이 주목된다. 특히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대목이 주목된다.

V. 나가는 말: 몇 가지 제안을 포함해

오늘날의 시점에서 보건대, 대북·통일정책의 국내적 환경에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첫째, ‘통일지향적 민족주의’ 또는 ‘민족지상주의’ 또는 ‘통일지상주의’의 호소력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40대 이하의 연령층은 물론이고 50대 이하의 연령층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i) 북한 스스로가 드러낸 북한 체제와 사회의 부정적 측면이다. 무엇보다 너무나도 처참한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사는 약 30만 명 북한주민들의 생활상은 북한에 대한 일말의 이해심마저 없애고 있다. 나치의 아우슈비츠를 연상하게 하는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철저한 인권말살은 ‘우리가 북한을 돕는 것은 결국 아우슈비츠 상황을 존속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믿음을 강화시킨다. 북한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반대자에 대한 숙청, 무자

비한 처형방식, 그리고 자기 고모부도, 자기 이복형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살해하는 데 나타난 김정은의 비인간적 행태 역시 북한에 대해 등을 돌리게 만든다.

북한은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이후 “우리는 김일성민족이다”라는 구호를 제시했다. 좌파 이론가들 가운데 몇몇은 그 구호가 김일성이 죽은 이후 결집력이 이완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구호일 뿐이라고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지만 우리로서는 결코 경시할 수 없다. 우리가 어찌 김일성민족이란 말인가. 그리고 자신의 편의에 따라 말을 자주 바꾸는 북한 통치자들의 과거 언행을 고려한다면, 언젠가는 “너희는 김일성민족이 아니므로 숙청의 대상이다”로 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구호는 남과 북이 동일한 민족이므로 서로 협력해야 하며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통일지향적 민족주의’의 기반을 약화시킨다.

(ii) 남과 북 사이에 경제적 격차가 현격하게 벌어진 현실이다. 몇몇 보기를 들면, 2019년 현재 북한의 명목국내총생산(GNP)은 남한의 54분의 1이며 국민총소득(GNI) 역시 54분의 1이다. 2019년 현재 북한의 1인당 GNI는 남한의 27분의 1이다. 2019년 현재 북한의 발전공급량은 남한의 24분의 1에 해당된다. 2019년 현재 북한의 무역총액은 남한의 322분의 1로, 이것은 북한의 11개월 무역총액은 남한의 1일 무역총액에 맞먹는다는 뜻이다.

남한의 많은 사람은 특히 40대 이하의, 또는 50대 이하의 연령층은 이미 세계 10대 또는 11대 경제대국으로 자리를 잡은 남한이 저러한 형편의 북한과 과연 통일을 하는 것이 남한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통일을 추구하기보다는 차라리 서로 떨어져 살면서 교류와 협력은 하되 전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믿음이 비록 공개적이지는 않더라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둘째,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국민적 태도에도 변화가 감지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통일이 가까워졌다”라든가 “전쟁의 위험이 사라졌다”라고 믿는 국민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사이 여러 차례 열렸기에 ‘환호제감(歡呼遞減)의 법칙’이 나타났다는 뜻이다.

셋째,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미북정상회담의 개최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개발은 저지되지 않고 오히려 진전됐다는 인식은 이제 남북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북한 핵개발 저지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보기에, 이제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었다. 최악의 경우에는, 북한은 전략핵은 아니라고 해도 전술핵은 우리를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형편이다. 이것을 현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인정의 기초 위에서 대북통일정책은 입안되어야

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 핵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좌파정부는 대북경제지원의 확대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대북경제지원은 북한의 강경한 대남자세를 완화시켜 줄 것이며 남북 사이의 부전(不戰)과 평화를 유도할 것이다”라는 전제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 북한은 우리의 호의를 자신의 체제강화와 핵개발에 악용할 뿐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미국을 비롯한 우방과의 유대강화가 매우 중요해졌다. 대한민국은 대륙국가가 아니라 해양국가와의 우호협력 속에서 성장·발전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이렇게 볼 때, 미국과 일본을 멀리하고 중국과 가까워지려는 대외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특히 일당독재국가이면서 조선=한국을 여전히 자신의 ‘속방’ 정도로 여기는 중국에 대해서는 신중하면서 현명한 판단이 요청된다.

미국과 관련해, 바이든정부의 대중정책 및 대북정책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문재인정부 기간에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바이든정부는 중국에 대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결코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문제에 몰두해 북한에 대해 관심을 덜 쏟을 수 있으며 그리하여 북한 핵개발에 대한 조치를 늦출 수 있을 것 같다. 반면에 북한이 자신의 핵무기력을 과시하기 위해 어떤 충동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북한에 대한 부분적 무력공격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여섯째, 진부한 표현이지만 통일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5년 임기의 대통령이 ‘내 임기 안에’ 큰 성과를 내겠다는 의욕을 갖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총리였던 조르주 클레망소는 “전쟁은 너무도 중요해서 장군들에게만 맡길 수가 없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이 말을 원용해 필자는 “통일은 너무도 중요해서 5년 단임의 대통령에게만 또는 어떤 짧은 시기에만 맡길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제는 우리가 통일의 꿈은 결코 버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침착하게 분단상황을 평화유지의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에서 동서독분단시대를 관찰했으며 이어 독일통일을 관찰한 박성조 교수와 그의 동료들이 함께 집필한 『남과 북 뭉치면 죽는다: 준비 없는 교류와 통합 추진 그 위기의 시나리오』(랜덤하우스코리아, 2005)는 반드시 정확한 지침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쯤):삭제** 참고할 만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6·15공동선언」의 제2항에 나타난 남북연합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남북연합은 한반도의 두 국가를 있는 그대로 인정

하며 서로 침략을 하지 않는 가운데 평화를 유지하는 제도적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일곱째, 대한민국은 글자 그대로 잿더미 위에서 국민 모두의 피땀어린 희생으로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우방의 도움을 받아 오늘날의 지위에 올라섰다. 그 과정에서 문제는 많았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경제를 일으켰으며 문화를 세계에 전파한 민주적 경제문화대국으로 성장했다. 반면에 북한은 거듭 말하지만 ‘실패한 국가’가 됐다. 백성은 제대로 먹이지 못하면서, 그리하여 극심한 경우에는 초근목피로 연명하게 하거나 탈북해 만주와 중국대륙을 유랑하게 만들어놓은 채 국가폭력을 일상적으로 행사하는 폭압적 국가가 됐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좌파인사들은 자신들의 역사인식을 되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지난 몇 해 동안 국민 사이에서는 대한민국 장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많은 나라가 부러워하는 성취가 하나씩 돌씩 무너져가고 있으며 ‘쇠락’의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민주적 경제문화대국으로 더욱 성장시키는 노력을 계속하는 가운데 북한주민들로부터 선망을 받고 합류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중요하며 특히 한미동맹 그리고 그 연장선 위에서의 한미일협력은 긴요하다. 이것이 비록 더딘 것 같지만 종국적인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 인천대학교 통일·통합연구원 주최 한반도통일문제세미나(2021년 2월 2일)에서 발표한 논문